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목차

04	유엔『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05	제2조 제1항 규약이행을 위한 일반 의무
11	제2조 제2항 차별금지
15	제6조 노동할 권리 및 제7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25	제8조 노동3권
28	제9조 사회보장권
31	제10조 가족에 대한 보호
35	제11조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39	제12조 건강권

목차

- 45 제13조 교육권 및 제14조 무상교육
- 48 제15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및
과학의 진보와 그 이익을 향유할 권리
- 51 일반 사항
- 58 부 록
- 97 유엔『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영문본)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1.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함)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 규약의 이행에 대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보고서 작성 지침(E/C.12/2008/2), 유엔총회 결의 62/268 및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E/C.12/KOR/CO/4)를 참고하여, 2017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사회권규약 이행 조치를 기술하였다.
2. 법무부는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2023년 8월 18일 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각 부처 및 기관에서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검토하고 일부 반영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제2조 제1항 규약이행을 위한 일반 의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3. 최종견해 제6(a)문단 관련, 정부는 2022년 제3차 NAP 이행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4. 최종견해 제6(b)문단 관련,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 개선을 통해 순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제3차 NAP에 ‘소관부처 및 기관이 제3차 NAP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실히 이행하며,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상호 협조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5. 최종견해 제6(c)문단 관련, 정부는 NAP 수립·시행의 근거규정인 「국가인권정책 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¹⁾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새 정부의 인권정책 기초와 국제기준 및 새로운 인권 수요를 반영한 제4차 NAP 수립을 추진 중이다.

규약의 국내 적용

6. 위원회의 최종견해 제8(a)문단 관련,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규약이 국내 법체계에서 온전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법부를 비롯한

1) 제3조(구성), 제6조(소위원회), 제10조(자문위원), 제11조(협조요청 등)

정부기관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권규약과 규약상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아래와 같이 계속하여 제고하고 있다.

7. 사법연수원은 사회권규약상의 권리 및 관련 재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연수를 사회권 관련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된 법관이나 관심 있는 법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사회권규약에 관한 인식의 공유를 확대하고, 규약의 의미와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좌를 구성할 것이다. ※ 〈부록〉 표-1.
8. 법무연수원은 2018년부터 인권교육을 검사 기본교육에 필수 편성하였으며, 특히 인권 전문교육 과정은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부록〉 표-2.
9. 법무부는 조약기구 보고절차를 비롯한 유엔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정부기관 담당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4월 ‘유엔인권메커니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에는 입법부와 사법부 담당자도 참석하였으며, 위원회의 제4차 최종견해를 포함한 국제인권기구의 주요 권고사항을 소개하였다.
10. 최종견해 제8(b)문단 관련, 정부는 사회권규약과 국내외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공공논의를 장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주제에 대한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개최²⁾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고절차에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담회·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법무부 누리집에 한글로 번역된 규약 전문, 제4차 국가보고서 및 질의목록

2) 제4회 국제인권심포지엄, ‘인권정책의 신(新)패러다임 - 사람 중심 지능정보 사회, 어떻게 이를 것인가?’ (2018).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9).

제1회 기업과 인권 포럼,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의 실천방안 및 정부의 역할’ (2020).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보호·존중·구제의 이행: ESG 시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과제’ (2021).

기업과 인권 세미나, ‘ESG 담론 확산 과정에서의 기업과 인권 국내 이행방안’ (2022).

(List of Issues)에 대한 정부 답변서를 게재하였다.

11. 최종견해 제8(c)문단 관련,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지적재산권(제22조), 교육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3권(제33조), 환경권(제35조) 보장 등 규약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2018년 사회권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 추진되어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않았다.
12. 국내법원이 규약이나 규약상 차별금지(제2조 제2항), 노동권(제6-7조)을 원용하여 내린 판례들은 부록에 기술하였다. ※ 〈부록〉 표-3.

구제에 대한 접근

13. 최종견해 제10문단 관련,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소송구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소송구조를 위한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여 편성액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약 30% 증가하였고, 소송구조 사건도 2017년 총 8,090건에서 2021년 17,665건으로 증가하였다. ※ 〈부록〉 표-4.

최대 가용자원

14. 최종견해 제12(a)문단 관련, 공공사회복지 지출 통계는 〈부록〉 표-5에 기술하였다.

반부패

15. 최종견해 제14문단 관련, 정부는 내부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³⁾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법률을 개정하였다. 특히 제정 당시 180개였던 공익신고 대상인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이 2021년 47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⁴⁾
16. 2016년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3,524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211건(60.7%), 금품등 수수 4,900건(36.2%),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413건(3.1%)이다. ※ 〈부록〉 표-6.
17. 정부는 2022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수용자 지도·처우 및 계도 등 교도관 업무’ 등을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에 추가하였으며,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18. 정부는 청렴포털 시스템을 통해 부패신고 현황을 관리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청렴포털은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필요한 반부패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반부패 종합 정보시스템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부패,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건을 접수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의 비위면직자 등 부패공직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3) 2011년 제정되었다.

4) 2017.10.31.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5개 추가하여 총 284개, 2020.5.19. 대상법률 183개 추가하여 총 467개, 2021.4.20. 대상법률 4개 추가하여 총 471개이다.

실태를 점검하여 사회적 부패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부록〉 표-7~8.

공적개발원조(ODA)

19. 최종견해 제21(a)문단 관련,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GNI 대비 ODA 비율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ODA 규모를 전년 대비 21.3% 증가시켰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이후 대한민국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11.1%이다. 2021년 ODA 규모는 28.7억불로 2010년의 11.7억불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만,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ODA/GNI 목표치 (0.7%)는 정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⁵⁾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에 따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ODA/GNI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20. 최종견해 제21(b)문단 관련, 정부는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비율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증가하는 최빈국의 유상원조 수요에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2년부터 2021년간 최빈국에 대한 유·무상 원조 평균 비율은 47 대 53이며, 유·무상 원조 비율 변동 폭이 아주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단, 유상원조(EDCF) 지원 시 수원국의 외채상환능력, OECD 국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국을 선정하고 있으며, 최빈국에는 여타국에 비해 양허성이 높은 유상원조 자금을 지원 중이다.

5) (ODA/GNI 비율) 한국: 0.16% (2021년 DAC 회원국 29개국 중 25위, DAC 평균: 0.33%)

21. 향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인정액 기준 유·무상 원조비율을 40 대 60으로 유지하는 것을 매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중이며, 적절한 비율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제2조 제2항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22. 최종견해 제23문단 및 제25(c)문단 관련, 제21대 국회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 관련 법안이 총 4차례 발의⁶⁾ 되었으며, 국회에서 2022년 5월 법안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

23. 최종견해 제25(a)문단 관련,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24. 최종견해 제25(b)문단 관련,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사법부의 2심 판결⁷⁾이 나왔으나,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동성결합 상대방을 배우자와 같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6)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2101116,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822,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964,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2330,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7)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25. 최종견해 제25(d)문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제18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축제에 공식 참여하고 있으며, 축제 기간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에 무지개 현수막 게시, 무지개 전광판 송출 등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연대의 메시지, 혐오·차별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 2019년 ‘마주캠페인’을 실시하여 성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대항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였고, 2022년 5월에는 국내 방송사와 함께 제작한 차별금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특별 편성하여 방영하였다.

외국인

26. 최종견해 제27문단 관련, 법무부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6월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 아동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에 부모 등이 그 출생 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2023년 6월에는 의사·조산사 등 분만 관여자가 시·읍·면장에게 출생정보를 통지할 의무 등을 포함한 같은 이름의 법률안이 추가로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아동 출생등록을 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아동의 출생 직후 질병 예방 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전수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수조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 5,183명에 대해 출입국관리 공무원 조사반이 2023. 8. 23.부터 10. 6.까지 아동 보호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소재 및 등록·출국

여부, 양육 상황 등을 확인하였다.

27. 정부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하이코리아(Hi-Korea)’ 웹사이트(www.hikorea.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일상생활과 권리 행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입국 시 여권상에 기재하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표준화’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주 및 영주 자격 외국인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이들의 권리 의식을 함양하고 조기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28.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6,842명이다.
29.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6개월 체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통한 의료보장을 강화하였다.⁸⁾ 그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2018년 12월 95만 명에서 2022년 12월 132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구성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고, 국민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제도로 세대 구성 확인이 어렵고 생활기반이 없어 정확한 소득·재산 파악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고, 장기적으로 체류할 것으로

8) 2019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예상되는 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 외국인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에서 파악되는 소득·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인도적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을 실시하고 있다.

30.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합법·불법 등 체류 자격여부와 관계없이 무료 코로나 19 진단검사 및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한편, 진단검사 및 예방접종 관련 정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31. 2021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가입자 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32. 정부는 2019년 4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가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사유로 인한 체류자격(G-1)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제6조 노동할 권리 및 제7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비정규직 고용

33. 최종견해 제29(a)문단 관련,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⁹⁾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직종 내, 직종 간 노무제공 형태가 다양하여 실태조사 및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노동관계법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에 대해 고용보험¹⁰⁾과 산재보험¹¹⁾이 적용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보호를 하고 있으나, 그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무제공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무제공자 보호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의 보호 대상에는 하청근로자를 비롯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
34. 최종견해 제29(b)문단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에 따라 부당한 계약 갱신거부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을 통해 권리구제

9) 2022년 기준 약 56만명으로 파악된다.

10) 2021. 7월부터 현재까지 19개 직종에 대해 적용

11) 2023. 7월부터 현재까지 18개 직종에 대해 적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듯 부당한 계약 갱신거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입법조치는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무기계약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용자는 원직복직 조치의무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과 비교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시에만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35. 최종견해 제29(c)문단 관련, 파견사업의 적법한 운영과 형식상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는 불법파견 시정을 위해 파견·사내하도급 제도 사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파견이 인정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유무는 모든 근로감독 시 필수 점검항목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차별 담당 감독관을 지정하여 적극적인 차별시정 현장 지도·점검 체계를 마련하였다.

※ 〈부록〉 표-9.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범위

36. 최종견해 제31문단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¹²⁾ 또한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다.¹³⁾ 현재 가사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더 많이 동 법의 적용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고충·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⁴⁾ 그러나 농축산·어업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의 대상이 자연물이고, 업무가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는 산업적·업무적 특수성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불가피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적정 보수

37. 최종견해 제33문단 관련, 정부는 매년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 시 최저임금제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12) 다만, 가사사용인(제11조), 농·축산업, 어업근로자(제63조)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13) 2021년 6월 제정하여, 2022년 6월부터 시행 중이며,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다만, 가사서비스는 특성상 일률적인 휴게시간 부여가 곤란하여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이용계약을 통해 개별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주 15시간이상의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14) 2023년 10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67개소이다.

있다.¹⁵⁾ 이외에도 최저임금제 현장안착 및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홍보, 상담 및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시행 중이다.

38.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장의견 청취, 실태조사, 각종 통계 분석 등을 통해 경제상황과 소득분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있다. 그 결과, 저임금근로자 비중 감소¹⁶⁾, 임금 5분위 배율 감소¹⁷⁾ 등 근로자 임금격차가 완화되는 추세이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2000년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¹⁸⁾ ※ 〈부록〉 표-10.

성별임금격차

39. 최종견해 제34문단 관련, 정부는 2020년부터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¹⁹⁾하고, 성별 임금통계 등을 공표하고 있다. ※ 〈부록〉 표-11~12.
40.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는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별 임금현황 및 격차 원인 분석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성별 임금현황

15)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 및 기소 건수는 2020년 2,901건(기소 1,108건), 2021년 2,233건(기소 901건), 2022년 1,897건(기소 743건)이며, 기소 건수에는 일부기소, 기소중지 등이 포함되어있다.

16)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1년 15.6%로 감소하였다. (저임금근로자 비중: 중위임금의 2/3 미만자의 비중)

17) 임금 5분위 배율은 2017년 5.06배에서 2021년 4.35배로 감소하였다. (임금 5분위 배율: 상위 20% 평균임금 / 하위 20% 평균임금)

18)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가사사용인과 「선원법」상 최저임금 대상인 선원 및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9)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이며, 이 중 목요일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한다.

제출대상을 AA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2021년 5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을 명령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2년 6월에는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에서 임금의 개념을 「고용산업보험료징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개념으로 정정하고, 전년도 장기휴직자, 중도입사자, 단시간근로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개정하여 임금현황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노력

41. 최종전해 제35(a)문단 관련,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을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 일하는 환경 및 인프라 개선과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2년 6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기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함께 재직 중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추진의 법적인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²⁰⁾ ※ 〈부록〉 표-13.
42.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취업상담·직업훈련·일경험·사후관리 등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에 159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임신부터 직장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20) 법 개정을 통하여 정책대상 및 범위확대, ‘경력단절 예방’ 정의규정 신설 및 사업내용 구체화,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및 백서 발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를 겪는 재직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위기로인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력단절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 〈부록〉 표-14~16.

43. 구인·구직 매칭 성과가 높은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²¹⁾하고, 지역·산업별 인력수요 및 미래 직업전망에 기반한 지역핵심·거점 산업 중심의 지역밀착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²²⁾하는 등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 및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협력망 구축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부록〉 표-17.

44. 최종견해 제35(b)문단 관련, 정부는 양육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먼저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남성의 육아참여 확산을 위해 2022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²³⁾를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0년 27,423명에서 2022년 37,885명으로 38.2% 증가하였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 확대²⁴⁾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추진 중이다.
45.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통해 보육시설 인프라를 크게 확대하고

21) 2017년 46개였던 고부가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2022년 66개, 2023년에는 7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22) 2022년 2개였던 지역밀착형 과정은 2023년에 6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23)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24) 자녀 연령(8세→12세), 기간(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최대 36개월)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상생형 어린이집도 2023년 76개소로 2020년에 비해 16.9% 증가하였으나, 사회·경제·조직 문화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실질적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득 보전을 통한 남녀 육아휴직 확대, 유치원과 보육원 통합을 통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부록〉 표-18.

성별대표성

46.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직, 공공기관, 군·경찰, 정부위원회 등 12개 주요 분야에 대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을 수립·추진하였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실적을 점진한 결과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은 2017년 6.5%에서 2022년 11.2%로 증가하였고, 국가직 본부 과장급(4급 이상)도 2022년 26.4%로 2017년 대비 11.6%p 상승하였다. ※ 〈부록〉 표-19.
47.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추진 노력을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고 기업 의사결정직위의 성별대표성 제고, 기업 관계자 인식 개선 등을 위해 2019년부터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업이 스스로 여성임원 확대 등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형태의 자율협약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48건의 협약²⁵⁾을 체결하고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48. 2020년에는 일정규모²⁶⁾ 이상의 기업 이사회를 특정성별로만 우선하지 않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21년에

25) 계열사를 포함한 총 100개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26) 자산총액 2조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에는 ‘이사회 성별 다양성’ 지표가 포함되었다.

49. 이와 함께, 기업 내 성별다양성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균형적 인력운영과 조직문화 개선 방향을 자문하는 컨설팅을 2019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행복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문화 우수기업을 방문하는 등 민간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고용상 차별

50. 정부는 여성다수고용 사업장 및 고용상 성차별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 지도 등을 병행하고 있다. 2022년 5월부터는 시정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고용상 성차별²⁷⁾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²⁸⁾ 등의 시정을 명령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매년 확대해왔으며, 2023년에는 1,000여 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²⁹⁾
51. 또한 매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이행성과 및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AA 부진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명단을 공표하고 있고, 차별시정을 위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27)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서의 성차별을 의미한다.

28) 명백한 고의에 의한 차별 또는 반복적 차별의 경우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29)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2020년 400개소, 2021년 858개소, 2022년 996개소로 꾸준히 확대해왔다.

52. 최종견해 제37문단 관련, 정부는 사업장변경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추가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초 취업활동기간 3년 중 3회³⁰⁾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폭행·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³¹⁾의 인정, 지방관서 직권조사, 근로감독관 등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처리 중이다. 그 결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 101,668건 중 99.8%(101,416건)가 승인되고 있으며 승인 건의 86.5%가량이 노사 자율합의 등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업장변경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3.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시 점검 대상 사업장의 약 40%를 농축산·어업 사업장으로 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근로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 중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을 사업주가 보관하는 행위 및 협박, 착취 등 강제근로 여부 등도 확인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에 사법처리하고 있다. 인권침해,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5천5백 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30) 재고용 기간 1년 10개월 내 2회

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협의회이다.

제8조 노동3권

파업권

57. 최종견해 제39문단 관련,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고, 2021년 4월 협약 제87호, 제98호 등을 비준하였다.
58.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과괴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법원은 파업의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 발생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등 업무방해죄 적용을 대폭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권 행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³³⁾
59. 한편,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을 사전에 제한하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³⁴⁾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어 필수공익사업장³⁵⁾에서도 파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를 허용하되 공익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일부 제한한다. 한국은 노조법 제42조의2에 따라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33)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또한 파업권 행사는 사용자의 재산권, 비파업근로자의 근로권 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국의 법령상 파업권 제한 범위가 국제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4) 2008년 폐지

35)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ILO의 필수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전력, 급수, 전화 사업에 대해서도 파업을 사전에 제한하고 있지 않다. 국내법상 필수유지업무는 ILO의 필수사업³⁶⁾ 및 최소사업³⁷⁾과 성격이 유사하고 그 범위도 ILO의 기준과 비교할 때 넓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업장별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노·사간 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0.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외 구속 금지, 대체 근로·도급·하도급 및 파견 금지, 선제적 직장폐쇄 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한 쟁의행위예의 참가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등 보복 조치는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감독기관에 고소·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 〈부록〉 표-20~21.

-
- 36) ILO 필수사업은 사업의 중단이 전체 또는 일부 국민의 생명, 개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가리킨다. 병원부문, 전력사업, 급수사업, 전화사업, 경찰 및 군인, 소방사업, 공공·민간 교도소 서비스, 항공관제가 이에 포함된다.
 - 37) ILO 최소사업은 (1) 사업의 중단이 전체 또는 일부 국민의 생명, 개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업, (2) 필수사업은 아니지만 파업의 범위와 기간이 국민의 정상적인 생활 여건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3) 기본적으로 중요한 공공사업을 가리킨다. 선박운송, 국립항만기업 및 항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 지하철, 철도 운송, 여객 및 상품 운송, 우편, 조폐·은행업, 석유부문, 교육부문, 동물보건, 기상학이 이에 포함된다.

노조권

61. 최종견해 제41문단 관련,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가입범위를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하여 근로자라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업자·해고자는 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당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향유하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개입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62.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동조합 설립·가입을 전면 허용하며, 복수노동조합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³⁸⁾ 최소화하고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더불어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경우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정대표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고자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감독기관에 고소·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두고 있다.

38)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 저해, 소수노조의 실질적 교섭력 부족, 과도한 교섭 비용 등

제9조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권과 사회서비스

63. 최종견해 제43문단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로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³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노인,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30세 이상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⁴⁰⁾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효과로 이전까지는 감소 추세였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가 2017년 말 기준 158만 명에서 2022년 말 기준 24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 수급자 수 및 급여액 확대를 통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 및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다. ※ 〈부록〉 표-22~23.
64.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다. 정부는 ‘품질평가’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품질 인증제’를 시범도입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경우 기존 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발달재활 서비스와

39) 고소득 또는 고재산가의 부모나 자녀가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과 재정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기준을 설정하였다.

40) 2017년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적용 대상 제외, 2018년 주거급여에 대한 기준 폐지,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 30세 미만 한부모 포함 가구, 2021년 노인, 30세 이상 한부모 포함 가구 적용 대상 제외 및 생계급여에 대한 기준 폐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2024년부터 평가를 추진하도록 준비 중이다.

※ 〈부록〉 표-24.

국민건강보험

65. 최종견해 제45문단 관련,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2023년 1월 발표하였다. 동 지원대책에는 공급 감소나 인프라 붕괴 우려가 있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분야 진료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외그룹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66.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급여기준 완화, 본인부담을 인하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였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1.8% 상승하였으며, 특히 1인당 진료비의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2017년 77.8%에서 2021년 80.3%로 2.4% 개선되어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질환 중심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데 기여하였다. ※ 〈부록〉 표-25.
67. 또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중 소득 하위 50%인 대상자와 지급액은 158.8만명, 1조 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68.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7억원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하는 보완적 의료비 지원제도로써 2018년부터 도입하였다. 2023년 5월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외래진료 대상 질환을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한도를 연간 최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였다.

제10조 가족에 대한 보호

노인

69. 최종견해 제47(a)문단 관련, 국민연금은 2022년 기준 22,498천명이 가입하였고 월 평균 연금액은 약 53.3만원이며,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 기준 평균소득의 약 43%이다. 국민연금을 보완하고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시행 당시 월 9.9만원이었으나, 2021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약 597만 명에게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6년 43.6%였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논의하여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부록〉 표-26~27.
70. 최종견해 제47(b)문단 관련,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개인별 욕구에 따라 건강관리, 일상지원, 재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살던 곳에서 가능한 한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재가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타 지역에 비해 퇴원환자 재가 일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⁴¹⁾ 2023년

41) 선도사업지역 퇴원환자 재가 일수는 2019년 303일에서 2022년 336일로 늘어났고, 대조군 지역 퇴원환자 재가 일수는 325일에서 322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하반기부터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대상 방문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재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71. 최종견해 제47(c), (d)문단 관련,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가정 내 장기체류에 따른 가족 간의 갈등, 시설 내 돌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다.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에 소재한 38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20개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행위 발견 시 신고자의 정보 노출 없이 휴대폰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보급하였다. 학대 신고는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되고 기관 종사자가 상담 및 현장조사를 거쳐 학대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노인학대 방지 등 입소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양시설 내 CCTV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⁴²⁾ 또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방문하여 모니터링 실시 및 인권상담을 지원하는 인권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등을 노인학대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노인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 ※ 〈부록〉 표-28~30.

아동

72. 정부는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전자문서 등 형태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42) 2023.6. 부터 시행 중이다.

도입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22년 3월 4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위 개정안은 2023년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3년 7월 18일 공포되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73. 최종견해 제49문단 관련, 현행 「형법」상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1953년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 살해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각각 삭제하여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74. 또한 2021년 1월 정부는 훈육을 명목으로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민법」제915조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였다.
75. 최종견해 제49(a)문단 관련, 정부는 아동을 보호하거나 관리·교육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부록〉 표-31.
76. 최종견해 제49(b)문단 관련, 정부는 아동학대 발생 시 학대행위를 중단시킴과 동시에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 신고단계부터 사건종료까지 응급조치(제12조), 긴급임시조치(제13조), 임시조치(제19조), 보호처분(제36조), 피해아동보호명령(제47조)과 같은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52명을 배치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8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25개소를 설치하였다. ※ 〈부록〉 표-32~35.

77. 최종견해 제49(c)문단 관련,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를 통해 일시보호 되는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적합한 가정에 위탁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도입하였다. 2021년 6월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 피해아동과 같이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부터는 이러한 가정에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78. 정부는 위탁가정 모집을 위하여 보도자료, TV공익광고, 라디오, 유튜브, 웹포스터, 리플렛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다.
※ 〈부록〉 표-36.
79.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통해 2021년에는 52명, 2022년에는 43명을 보호하였으며, 전문가정위탁으로 총 271명⁴³⁾을 연계하였다.

43) 2022년 말 기준 보호 중인 아동은 237명이다.

제11조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식수권

80. 최종견해 제51문단 관련,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극한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댐, 하천, 저수지 등 수자원 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발전용댐 용수를 생활 및 공업 용수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수자원 확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수용가에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상수도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다.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 시설노후화로 수도시설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 지원 등도 함께하고 있다.
※ 〈부록〉 표-37~39.
81. 상수도 비보급지역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다수의 지하수 관정시설들이 노후되어 있는 등 외부 오염에 취약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개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 검사를 실시한 후 수질기준을 미충족한 관정을 대상으로 청소와 소독 등을 지원하였다. 2022년 2,297개 관정에 대하여 청소와 소독을 지원한 결과, 수질 개선효율이 88.8%로 나타났다. ※ 〈부록〉 표-40~41.
82. 환경부는 산간오지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무인으로 공급하는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서지역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세계 최초 담수화 선박을 확보할 예정으로, 담수화 물을 생산하여 물이 부족한 해안 및 섬지역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적으로 도서·내륙 등 물 공급이 취약한 지역⁴⁴⁾에는 지하수 저류댐 설치⁴⁵⁾를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량 공급이 가능한 하폐수 재이용수의 공업용수 공급, 연간 1.2억 톤씩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소수력 발전, 도로청소⁴⁶⁾ 등에 활용하여 대체수자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거권

83. 최종견해 제53(a)문단 관련, 정부는 2021년 전국 단위의 노숙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중장기적인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시행하였다. 계획에는 주거, 의료, 거리 현장 지원, 지역사회 재정착 준비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대책이 반영되어있다. 의료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1·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확대하도록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동·하절기 응급 잠자리 및 방한·냉방용품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남성 대비 여성 노숙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맞춤형 사례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84. 최종견해 제53(b)문단 관련,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주택공급 체계의 한계를

44)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역,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지역,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주변에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등을 말한다.

45) 2022년 12월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도에 설치한 지하수 저류댐은 약 5개월간 12만톤의 용수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가뭄 피해 해소에 기여하였다.

46) 살수차 또는 설비를 이용한 청소.

메워주는 대안으로서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변화를 통한 사회주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공공임대는 개발가능 택지부족과 재원부담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가 어렵고, 민간임대는 영리추구 특성상 높은 임대료로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공공매입임대를 민간이 기획, 조성, 공급, 운영하고 전 과정을 공공주택사업자(소유권자)가 지원 및 감독하는 테마형 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부록〉 표-42.

85. 최종견해 제53(c) 문단 관련,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 의무기간⁴⁷⁾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금지, 임대료 증액제한⁴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고, 공적의무를 준수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의 세제 혜택 부여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86. 정부는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2020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또한 임대료 인상율 상한을 5%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87. 정부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

47) 장기일반임대주택과 공공지원임대주택 모두 10년이다.

48)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제도개선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 중이다

88. 최종견해 제53(d)문단 관련, 정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퇴거조치에 대해 협의권, 대체주택 접근권 보장, 임시거주 대책 수립 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⁴⁹⁾ 앞으로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할 것이다.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47조, 제52조, 제59조, 제61조, 제65조, 제73조, 제81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5조, 제77조, 제78조에 따른다.

제12조 건강권

자살 방지

89. 최종견해 제56문단 관련,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5차 자살 예방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는 2027년까지 자살률 30% 감소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⁵⁰⁾,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특히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 생활터별(학교, 회사, 군부대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정책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90. 정부는 학생의 성격특성과 정서행동발달의 경향성을 파악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후 매 3년 주기⁵¹⁾로 실시하고,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문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하고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의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정신건강 위기학생 중심의 지원체계를 유지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관리 앱 확산 검토, 마음보호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학생 정신건강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등 모든

50)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51)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한 예방적 개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1. 정부는 근로자, 실업·구직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건강센터 및 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직무스트레스 관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등 심리상담을 지원하였다.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살, 직무스트레스 등 분야별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를 운영하였다. 또한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실업자·구직자에 대해서도 전문 심리상담사의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부록〉 표-43~45.

정신 건강

92. 최종건해 제58문단 관련, 정신보건서비스의 가용성과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정신건강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정신질환 조기인지 및 개입 강화, 정신응급서비스 체계 개선, 지속 치료 의료비 지원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및 인력 확충 등 지역기반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도 계획에 반영되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늘려 2023년 4,432억원을 편성하였다.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

93. 최종견해 제60문단 관련,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하여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정부는 2020년 11월 유관기관 토론회, 사회 각계와의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법」, 「모자보건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개정을 추진 중이다.⁵²⁾
94. 2021년 2월 현장 관계자 간담회 및 같은 해 5월 관련 포럼을 개최하였고, 이후 수렴된 현장 의견에 따라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임신·출산 매뉴얼을 보급하였다. 또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등의 과제를 포함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95. 정부는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접근성 보장 및 강화를 위해 임신·출산 종합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성·건강 교육을 추진하였고, 러브플랜 사이트(loveplan.kr)를 통해 임신의 유지·중결 등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해 의료전문가⁵³⁾의 의학정보⁵⁴⁾ 및 성·생식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온·오프라인 상담실을 운영하여 성매개 감염병 및 위기 임신 등의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앞으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남녀에게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할 수

52) 현재 정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제27장(낙태의 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권인숙, 박주민, 이은주의원 각 대표발의), 6주 이내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10주 이내의 경우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10주 이내의 경우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이 이에 해당한다.

53)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

54) 시술방법, 합병증 등

있도록 생식 건강관리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 〈부록〉 표-46.

HIV/AIDS 감염인의 의료

96. 최종견해 제62문단 관련, 대한민국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의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7. 정부는 국내 HIV 감염인은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HIV 치료제 구입비 및 관련성이 인정되는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진료비의 90%는 건강보험급여로 충당하며 나머지 본인부담금 10%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전국 단위의 ‘HIV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해 치료 중 감염인을 위한 복약관리, 생활 및 정서 상담,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 대상 감염인은 2022년 말 기준 11,396 명으로 전체 생존 감염인의 70%에 해당한다.
98. 정부는 「의료법시행규칙」을 통해 HIV 감염인이 차별 없이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인이 입원한 요양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비를 지원한다. 또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대상으로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내용이 포함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정부가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개설·운영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HIV/AIDS 감염인 진료 의료기관 길라잡이’를 개발하여

모든 의료서비스 기관 등에 보급하였다. 길라잡이는 HIV 감염인 진료과정에서 의료제공자의 차별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모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는 HIV 감염인 상담 또는 진료 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한다. 2023년에는 의사 대상 직무교육과정과 결핵 업무 관련 간호사 대상 보수교육과정에 ‘HIV 감염인 의료차별 관련 교과’를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다. 앞으로도 HIV 감염인의 고령화에 따른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 등에 대한 통합관리 및 지원 정책도 개발하여 감염인의 건강권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99. 초기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감염성이 높고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이후, 맞춤형 의료대응체계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일반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단·검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을 1만 개소 이상까지 확대하여 진료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특히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집중하고, 진료 당일에 치료제 처방까지 이행하며, 필요시 신속 입원까지 연계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별도 관리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양성자의 경우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관리·치료를 제공하였다. 무증상·경증 코로나19 양성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곤란한 경우 입소 가능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위중증 양성자의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중증, 준중증 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치료병상을 운영하는 한편 일반의료체계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투석·분만·소아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병상을 확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일련의 의료대응체계에 예산 지원 및 건강보험 수가적용을 통해 의료서비스 공급 및 질을 높이고 이용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제13조 교육권 및 제14조 무상교육

양질의 교육제공

100. 최종견해 제64(a)문단 관련, 정부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 3학년부터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영어 말하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학 관련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수학의 원리와 개념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온라인 수학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학 탐구 중심의 수학 학습 활성화 및 디지털 기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101. 또한 정부는 2010년부터 학교의 여건, 학생의 흥미와 소질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학생예술동아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2018년부터 문화소외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예술드림거점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수요·여건을 반영한 예술교육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102. 정부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2021년에는「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2023년 현재,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점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교육 등을 운영 중이다. 2025년에는 학점제가 본격 도입되어, 다양한 과목 지원과 함께 학생의 과목 이수를 지원하는 체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103. 최종견해 제64(b), (c)문단 관련, 정부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문항의 선행출제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전형에서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등)에 대해 선행학습 유발 정도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04. 아울러 학생들의 진로·진학 학습 상담 관련 사교육 참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교 진로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초등학생용 진로상담 및 정보 제공 사이트 ‘주니어 커리어넷’ 서비스를 개시하여 초등단계부터 맞춤형 진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중·고등학생용 ‘직업흥미검사 K형’ 개정 및 초등학생용 진로개발역량검사를 신규 개발하여 학교 진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 경제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에 평등한 접근

105. 최종견해 제64(d)문단 관련, 대한민국은 「헌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은 99퍼센트에 이른다.⁵⁵⁾ 정부는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확대하였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1인당 16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다. ※ 〈부록〉 표-47.

106.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5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 자료집(2022.8.)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의무교육을 추진하였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하였다. 2021년 12월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를 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에 ‘중도중복장애’를 추가하고,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 〈부록〉 표-48~49.

107. 2021년 4월 정부는 외국인 아동이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체류 중이며 취학 중인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조건부 구제대책을 마련하였다. 2022년 2월에는 국내 출생 아동 뿐 아니라 영유아기에 입국한 아동까지 구제대상에 포함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국내 체류기간 요건도 6-7년으로 줄여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였다.
108. 정부는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을 통해 이주아동의 입·취학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명확하게 매뉴얼에 규정할 예정이다.

제15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및 과학의 진보와 그 이익을 향유할 권리

문화적 다양성

109. 최종견해 제66문단 관련, 정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년마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국회에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1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및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10. 주요 정책과제로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및 확산을 선정하고, 생애주기별 문화다양성 교육, 유엔 지정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문화다양성 주간 대국민 캠페인, 이주민 등 다양한 문화 주체 간 상호 교류 및 소통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⁵⁶⁾ 외국인 주민 지속 증가로 인한 문화적 배경 다면화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는 한편, 인구·지역 등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류·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구성원 간 상호이해 증진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대학 다양성위원회 설치 확대 및 기업의 관심 고조 등에 따라 민·관 협력 정책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민간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논의를 확장할 예정이다. ※ 〈부록〉 표-50~51.

56)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문화다양성 사업 참여자의 문화다양성 인식이 참여 전 대비 평균 14.1% 상승하였다.

111. 정부는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Together Day)’로 기념하고 있다. 2023년도에도 5월 19일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행사를 진행하였다.
11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세계인 주간(Togther Week)’에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해 왔다.
11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법무연수원에서 ‘이민정책의 이해’ 과정을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도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지방행정권역별로 워크숍을 4회 개최하여 247명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114. 법무부는 2021년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하고, 정부의 통합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이민통합정책지표 및 지수 개발’을 진행하였다. 개발된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분석·활용하여 2023년에는 정책평가 및 정책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컨설팅 가이드북을 제작할 예정이다.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

115. 최종견해 제68문단 관련, 디지털이 경제·사회 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이 디지털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법정화되었고, 그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일반 사항

국가인권기구

116. 최종견해 제16문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여전히 「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도 사회권 관련 진정이 모두 ‘조사대상 아님’으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 차원에서 주장되는 사회권 관련 진정의 경우에는 조사·구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부록〉 표-52.
117. 사회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2017년 11월 24일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18. 국가인권위원회는 규약상 권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사회인권과’를 신설하였고, 2023년 사회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기구 구제절차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기업과 인권

119. 최종견해 제18(a)문단 관련, 정부는 기업과 인권의 국내 제도화를 위해 제3차 NAP에 기업과 인권 관련 장(章)을 신설하고, 2020년 ‘기업의 인권준중책임 법제 기초연구’를 실시하는 등 인권실사 법제화 가능성을 계속하여 검토해왔다.

2021년 정부는 국가의 인권존중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규정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120.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 및 관할권 내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권실사를 실시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2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국내 상장기업과 주요 산업협회 등에 약 2,400부 배포하였다. 동 길라잡이는 인권실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모든 기업이 단계적으로 인권실사를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2022년 12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본을 발간하여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하였다.
121. 최종견해 제18(b)문단 관련,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바, 사법적 구제절차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⁵⁷⁾
122. 최종견해 제18(c)문단 관련,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은 2019년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는 등 인권 친화적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및 제3자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세칙’을 제정한 이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고충상담 창구 설치 운영, 고충처리절차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DCF는 사업발굴,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심사, 모니터링, 사후 평가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성 인지적 관점 적용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로 인해 젠더마커 적용사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사업별 젠더 관련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설정 및 사후평가 시 젠더 관련 결과 분석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 〈부록〉 표-53.

57) 국제사법 전부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 결정 기준이 구체화(제2조)되고 총칙 및 유형별 규정 35개가 신설되었다.

123. 최종견해 제18(d)문단 관련, 정부는 OECD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의 영향력, 투명성, 포용성 및 효과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NCP 위원으로 인권, 노동, 중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였고, 민간위원의 선임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NCP는 접수된 이의신청사건의 처리를 위해 NCP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와 유기적인 업무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건처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이의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있다. 이의신청사건을 종결한 후에 발표하는 최종성명서에 피신청인인 다국적기업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NCP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사건 처리결과와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사건처리와 관련한 자료와 더불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에 대해 세미나, 설명회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 광고,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2023년 6월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은 한국 NCP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

124. 최종견해 제69문단 관련, 정부는 2023년 9월 그동안 축적된 사회권위원회의 결정례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125. 최종견해 제70문단 관련,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과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비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단기순환 외국인근로자의 가족동반 허용이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정규화 조치 등은 각종 부작용의 발생 우려가 있어 이민정책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내 정주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주거, 의료, 교육 비용 등) 발생, 동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 영주·거주 비자 등 다른 체류자격과의 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정부는 협약 내용 중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또는 인도주의에 관한 사항은 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개선을 위하여 노력 중이다.

126. 정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가입서를 기탁하여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2월 3일 국내 발효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27. 최종전해 제71문단 관련, 정부는 2018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에 따라 국내 여건을 반영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다.
128.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수립⁵⁸⁾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2040)’이 시행 중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K-SDGs 17개 목표 중 특히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등’의 지표를 관리하여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중이며, 차별 금지, 참여 및 책임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5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에 근거한다.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2024년에는 K-SDGs의 달성 정도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026~2045)’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권지표 개발

129. 최종견해 제72문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권을 포함한 전반적 인권상황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8~2020)’을 수립하고,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매년 인권통계를 생산, 공개하고 있다. 국가인권통계는 기존 국가승인통계와 행정자료에서 발굴한 인권 관련 통계, 「국가인권실태조사」⁵⁹⁾ 결과를 종합하여 생산하며, 크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등 3개 권리 유형으로 나뉜다. 전체 통계지표 총 467개 중 274개(58%)가 사회권에 관한 통계지표이다.

최종견해 배포 및 이행·후속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

130. 최종견해 제73문단 관련, 정부는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배포하기 위하여 법무부 누리집 및 2018년 8월 수립된 제3차 NAP 부록에 동 최종견해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59) 2022년부터 ‘인권의식실태조사’로 명칭 변경

게재하였고, 사회권규약 관련 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 게재하는 데 적극 협조하였다.

131. 또한 정부는 위원회의 제4차 최종견해의 이행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교류하였다. 정부는 2017년 11월 열린 토론회에서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 구성원의 평가와 그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9년 4월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였다.
132. 본 정기보고서 제출에 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열린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규약상의 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시민사회 구성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공통핵심문서

133. 최종견해 제75문단 관련, 정부는 유엔인권조약상 보고에 관한 지침(HRI/GEN/2/Rev.6)에 따라 공통핵심문서(common core document)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오고 있는바, 2022년 2월 최근 현황을 반영한 최신 문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제출하였다.



부 록

표-1. 사회권규약상의 권리 관련 법관연수 실시내역 (2018. 4.~2023. 4.)

(단위 : 호, %)

기간	연수명	인원
2018.3.18.~3.21.	노동사건실무	60
2018.3.19.~3.21.	소년보호재판실무	14
2018.3.22.~3.23.	가정·아동보호재판실무	18
2018.3.26.~3.29.	가사재판실무	80
2018.4.9.~4.11.	의료소송실무	45
2018.4.23.~4.24.	특수소송(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26
2018.5.14.~5.15.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35
2019.3.14.~3.15.	노동사건실무	52
2019.3.18.~3.19.	소년보호재판실무	11
2019.3.21.~3.22.	가정·아동보호재판실무	26
2019.3.25.~3.28.	가사재판실무	65
2019.4.15.~4.17.	의료소송실무	42
2019.5.23.~5.24.	국제인권법과 법관	35
2018.12.4.~12.6.	젠더법의 주요 쟁점	29
2020.3.19.~3.20.	소년보호재판실무	28
2020.3.23.~3.24.	가정·아동보호재판실무	53

기간	연수명	인원
2020.3.25.~3.27.	가사재판실무	118
2020.3.30.~4.1.	지식재산권소송실무	62
2020.4.6. ~ 4.7.	의료소송실무	78
2020.5.18.~5.19.	노동사건실무	86
2020.5.18.~5.19.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42
2018.4.23.~4.24.	특수소송(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26
2020.6.11.~6.12.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	35
2021.3.15.~3.16.	노동사건실무	52
2021.3.17.~3.19.	가사재판실무	11
2021.3.22.~3.23.	소년보호재판실무	26
2021.3.24.~3.25.	가정보호·아동보호재판실무	65
2021.3.29.~3.31.	지식재산권소송실무	62
2021.4.5.~4.6.	의료소송실무	106
2021.5.3.~5.4.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43
2021.8.9.~8.10.	노동재판의 주요 쟁점	87
2021.12.13.~12.14.	국제인권조약연구 I	52
2022.3.14.~3.16.	노동사건실무	194
2022.3.21.~3.22.	소년보호재판실무	49
2022.3.23.~3.24.	가정보호·아동보호재판실무	82
2022.3.28.~3.30.	지식재산권소송실무	107

기간	연수명	인원
2022.4.4.~4.6.	가사재판실무	155
2022.4.11.~4.13.	의료소송실무	107
2022.4.18.~4.19.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64
2022.5.9.~5.10.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89
2022.5.23.~5.24.	지식재산권소송의 주요 쟁점	106
2022.5.25.~5.27.	국제인권조약연구 II	51
2022.10.12.~10.13.	외국인재판실무연구	38
2022.12.12.~12.13.	환경소송실무연구 I	32
2023.3.6.~3.8.	노동사건실무	251
2023.3.20.~3.21.	소년보호재판실무	36
2023.3.22.~3.23.	가정보호·아동보호재판실무	67
2023.3.27.~3.29.	지식재산권소송실무	143
2023.4.3.~4.5.	가사재판실무	197
2023.4.10.~4.12.	의료소송실무	117

표-2. 검사 인권교육 현황 (2017~2023. 3.)

연도	과정명	교육기간	교과목명	인원
2017	검사장 리더십	11.20.~11.24.	성평등과 인권감수성	9
	신임검사 통합교육	5.~9.	양성평등	112
			양성평등 및 성희롱 방지	
2018	여성·아동수사과정	4.9.~4.10.	가정폭력 인권의식 교육	25
	경력검사 리더십 과정	5.8.~5.18.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성평등과 인권 감수성	41
	신임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6.18.~7.13.	인권보호와 공보수사준칙	78
		7.23.~7.25.	부 운영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차장검사 리더십 과정	9.3.~9.7.	인권위에서 바라본 검찰의 인권 현주소	16
	검사장 리더십	9.17.~9.21.	성평등 조직문화	13
	검사 맞춤형 인권교육	3.~11.(12회)	조사실습 및 동영상 피드백	170
	신임검사 통합교육	5.~9.	양성평등, 검사 직무윤리 사례토론, 인권과 소수자 보호 등	118
	신임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2.11.~2.22.	인권존중과 위반사례	127
		9.5.~9.6.	양성평등(Ⅰ,Ⅱ)	
		9.19.~9.20.	부 운영과 양성평등	

연도	과정명	교육기간	교과목명	인원
2018	여성아동 과정	3.20.~3.22.	성폭력과 인권	19
	저년차검사 역량강화과정	5.8.~5.10.	검사로서의 비전과 자세(양성평등, 갑질예방)	29
2019	경력검사 리더십 과정	5.13.~5.24.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양성평등과 인권감수성	47
	검사장 리더십	9.30.~10.2.	양성평등과 조직문화	8
	장애인전담검사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5.1.~5.3.	수사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인권보호수사준칙	43
		9.26.~9.27.	인권의 철학과 패러다임의 전환 등	
	외국인·다문화 북한이탈 주민 전담검사 과정	6.13.~6.14.	외국인에 대한 혐오차별과 인권, 이주민과 인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형사절차와 인권	24
	검사 맞춤형 인권교육	3.~11.(12회)	조사실습 및 동영상 피드백	139
	신임검사 통합교육과정	5.11.~9.30.	인권과 소수자보호, 양성평등 등	132
	부장검사 리더십	1.6.~1.17.	재심사건을 통해 본 강력수사와 인권	34
		11.2.~11.5.	인권보호와 공보관련 규정 등	31
	저년차검사 역량강화(필수)	6.8.~6.12.	강력사건과 인권	29
	경력검사 리더십	6.15.~6.19.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26
		7.6.~7.10.	양성평등	40
2020	인권감수성 향상 (장애인)	6.18.~6.19.	장애차별조사 실체와 사례 등	43

연도	과정명	교육기간	교과목명	인원
2020	인권감수성 향상 (외국인·다문화·북한 이탈주민 전담)	7.2.~7.3.	문화다양성과 인권 등	37
	인권감독관 인권감수성 향상	11.4.~11.6.	인권감수성의 이해, 혐오차별 및 평등법의 이해, 한국사회 인권상황과 개선과제, 수사와 인권 등	23
	차장검사 리더십	11.9.~11.11.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및 우리 사회의 인권, 양성평등	14
	신임검사 통합교육	'21.5.'~'22.1.	조사 롤플레이, 검사 직무윤리 사례토론 등	101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필수)	3.8.~3.1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력사건과 인권 등	37
		10.18.~10.22.		37
	경력검사 리더십	4.19.~4.23.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인권존중과 위반사례	32
		8.30.~9.10.		17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4.12.~4.23.	인권보호, 양성평등	33
		9.6.~9.10.		26
2021	차장검사 리더십	9.13.~9.15.	국가인권위 소개 및 우리사회의 인권 등	16
	검사장 리더십	11.8.~11.12.	인권감수성과 조직문화(양성평등)	10
	검사 맞춤형 인권교육	4.16.~6.25. (3회)	인권 친화적 조사를 위한 실습 및 피드백	36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전담검사)	3.10.~3.12.	수사기관이 실천할 수 있는 아동 인권 보호, 형사절차와 인권 등	23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장애인)	5.13.~5.14.	형사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호 등	41

연도	과정명	교육기간	교과목명	인원
2021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외국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7.1.~7.2.	수사재판 시 외국인 차별 실례와 사례, 문화다양성과 인권	29
2021	신임검사 통합교육	'22.	검사직무윤리토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등	89
	경력검사 리더십 교육	5.9.~5.13.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양성평등	25
		9.19.~9.23.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양성평등	15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6.13.~6.17.	양성평등, 인권보호	32
		10.17.~10.21.	양성평등	11
	차장검사 리더십 교육	8.30.~9.2.	인권 및 양성 평등	10
	검사장 리더십 교육	12.15.~16.	미술로 이해하는 양성평등과 인권	10
2022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필수)	6.20.~6.24.	양성평등	29
		9.19.~9.23.		27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장애인)	12.1.~12.2.	연극으로 보는 인권감수성, 인권을 기반으로 장애보기,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의 이해	27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외국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9.1.~9.2.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보는 인권, 인권침해 사례로 살펴보는 수사와 인권, 인권수사를 위한 자세, 인권 첫 걸음	28
	검사 맞춤형 인권교육	4.~11. (5회)	인권 친화적 조사를 위한 실습 및 피드백	51
2023	검사 맞춤형 인권교육	3.13.	인권 친화적 조사를 위한 실습 및 피드백	10

표-3. 사회권규약상 권리를 원용해 내린 주요 판례

사회권규약 제2조 2항 차별금지 관련(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외국인 차별 등)

- 대법원은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 이행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은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동성 군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른 성행위가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균형법 제92조의6(추행)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은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성과급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은 2022. 11. 24. 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서울고등법원은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에서,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에서, 원어민 영어보 조교사에게 에이즈(HIV)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거절을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사회권규약 제8조 관련(노동조합)

- 대법원은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 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은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사회권규약 제10조 관련(출산, 육아 등)

- 대법원은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직무에 복귀시키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사회권규약 제15조 관련(문화 다양성, 다문화주의 수용)

- 대법원은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연번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자	사건명
1	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2023-02-2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8860	2022-12-09	임금
3	서울고등법원	2021나2ㄹ021485	2022-09-23	임금
4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099	2022-01-19	장해급여등일부부지급 처분취소
5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456	2022-01-0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2063	2021-08-19	손해배상(기)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2019-10-29	손해배상(국)
8	대법원	2016도10912	2018-11-01	병역법위반
9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6	2017-08-11	병역법위반
10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609	2017-02-06	병역법위반
1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624	2017-02-06	병역법위반
12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794	2017-02-06	병역법위반

표-4. 구제에 대한 접근

1) 소송구조 사건 현황

구 분	①접수건수	②인용건수 (신 청)	③인용건수 (직 권)	④인용건수총합 (=②+③)
2017	11,999	5,848	2,242	8,090
2018	11,540	6,156	3,727	9,883
2019	12,341	7,265	3,817	11,082
2020	13,322	8,322	5,397	13,719
2021	13,881	9,047	8,618	17,665

2) 소송구조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편성액	집행액
2017	4,560	4,403
2018	6,022	4,197
2019	6,249	4,279
2020	5,337	4,903
2021	5,933	5,534

표-5.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 (2017~2022)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출금액(조)	185.6	206.8	235.9	279.3	—	—
GDP 대비 비중(%)	10.1	10.9	12.3	14.4	14.9	14.8

※ 출처: OECD Statistics ('23.10 기준)

※ 주: '17~'19년: 확정치, '20~'22년: 예측치, — : 수치 없음

표-6.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에 따른 제재 현황
(2016. 9. 28.~ 2022. 12. 31.)

(단위 : 명)

구 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외부강의 등	계
제재 확정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부가금)	101	1,767	11	1,879
수사, 재판 등 진행 중	339	1,234	9	1,582
합 계	440	3,001	20	3,461

표-7. 부패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률)		
								2020	2021	2022
접수	43,922	4,066	7,328	9,435	6,103	9,690	7,300	△3,332 (△35.3)	3,587 (58.8)	△2,392 (△24.7)
처 리	합계	43,928	3,966	7,224	8,718	6,355	10,176	△2,363 (△27.1)	3,821 (60.1)	△2,687 (△26.4)
	이첩 (고발)	1,557	221	306	415	446	128	31 (7.5)	△318 (△71.3)	△87 (△68.0)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률)		
									2020	2021	2022
처리	행동강령 위반 통보	955	48	78	190	252	361	26	62 (35.3)	109 (43.3)	△335 (△92.8)
	기관 송부	4,964	127	377	369	846	2,152	1,093	477 (129.3)	1,306 (154.4)	△1,059 (△49.2)
	종결	36,452	3,570	6,463	7,744	4,811	7,535	6,329	△2,933 (△37.9)	2,724 (56.6)	△1,206 (△16.0)

표-8. 비위면직자 부패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17	2018	2020	2021	2021	2022 (상반기)
합 계	1,438	308	291	310	216	214	99
금품·향응수수	678	191	159	129	91	72	36
공금횡령·유용	286	51	45	65	49	53	23
직권남용·직무유기	82	15	15	15	12	20	5
문서위변조	49	3	12	11	9	10	4
기 타	343	48	60	90	55	59	31

표-9.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감독 실시 실적

(1) 연도별 비정규직·비전형 고용규모, 고용형태별 비중,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사회보험 가입률 등 근로조건 통계

(단위: 천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정규직 고용 규모 ¹⁾		6,578 (32.9)	6,614 (33.0)	7,481 (36.4)	7,426 (36.3)	8,066 (38.4)	8,156 (37.5)
	한시적	3,725 (18.6)	3,823 (19.1)	4,785 (23.3)	4,608 (22.5)	5,171 (24.6)	5,348 (24.6)
	시간제	2,663 (13.3)	2,709 (13.5)	3,156 (15.3)	3,252 (15.9)	3,512 (16.7)	3,687 (17.0)
	비전형	2,112 (10.6)	2,071 (10.3)	2,045 (9.9)	2,073 (10.1)	2,278 (10.8)	2,131 (9.8)
사회보험 가입률 ²⁾	고용	44.1	43.6	44.9	46.1	52.6	54.0
	건강	45.3	45.9	48.0	49.0	50.3	51.7
	국민연금	36.6	36.6	37.9	37.8	38.4	38.3
자발적 선택 비율 ³⁾		50.0	53.0	55.2	56.6	59.9	62.8
정규직과 시간당 임금격차(정규=100) ⁴⁾		69.3	68.3	69.7	72.4	72.9	70.6

※ 자료: 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4)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간 중복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3) '19년부터 병행조사의 효과로 과거 미포착 기간제 근로자 규모가 반영되었으므로, 기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전년대비 증감으로 비교는 불가함

4) ▲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근로자: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해당

▲ 비전형근로자: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호출)근로자

- 5)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가입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 내 거주하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보다 낮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파견·사내하도급	1,349	1,609	1,626	636	534	489
차별	—	34	64	29	42	705

(2) 지방관서 차별담당 감독관 지정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감독관 수	—	47	48	48	48	48

※ '18년부터 관서별 담당 감독관 지정, '19년 지방 사무소 신설로 인원 증가

(3) 비정규직 근로감독 실시 현황

(단위: 사업장 개소)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파견·사내하도급	1,349	1,609	1,626	636	534	489
차별	—	34	64	29	42	705

※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

표-10. 최저임금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최저 임금액	6,470원	7,530원	8,350원	8,590원	8,720원	9,160원	9,620원
인상액	440원	1,060원	820원	240원	130원	440원	460원
인상률	7.3%	16.4%	10.9%	2.87%	1.5%	5.05%	5.0%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고용여건 등 고려하여 결정

(2) 최저임금 미만율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미만율(%)	6.1	5.1	4.8	4.4	4.4	3.4
대상자(천명)	974	817	788	720	743	560

※ 22.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3년도 통계는 '24.6월 집계 예정)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최저 임금액	6,470원	7,530원	8,350원	8,590원	8,720원	9,160원	9,620원
인상액	440원	1,060원	820원	240원	130원	440원	460원
인상률	7.3%	16.4%	10.9%	2.87%	1.5%	5.05%	5.0%

표-11.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연도	2017	2018	2018	2020	2021	
한국	34.6	34.1	32.5	31.5	31.1	('17년 대비 3.5%p 감소)

※ 출처: OECD Statistics

표-12. 공공기관, 상장법인 성별임금격차 통계

(단위 : 개소, 백만원 %)

연도	공공기관				상장법인			
	기관수 (개)	남 (백만원)	여 (백만원)	격차(%)	기관수 (개)	남 (백만원)	여 (백만원)	격차(%)
'20	369	77.6	56.1	27.8	2,149	79.8	51.1	35.9
'21	370	78.1	57.6	26.3	2,364	94.1	58.3	38.1
'22	361	78.9	59.0	25.2	2,614	86.8	60.2	30.7

※ 1인당 평균 임금 현황 및 성별 임금 격차

표-1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 비율, 경력단절여성 규모

(단위 : %, 천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경활률(15-64세) (%)	69.2	69.3	69.5	68.6	69.0	70.5
남	79.3	79.1	78.8	77.9	78.0	79.0
여	59.0	59.4	60.0	59.1	59.9	61.8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32.9	33.0	36.4	36.3	38.4	37.5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남	26.3	26.3	29.4	29.4	31.0	30.6
여	41.2	41.5	45.0	45.0	47.4	46.0
경력단절여성(천명)	1,831	1,847	1,699	1,506	1,448	1,397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경단여성규모)

표-14. 연도별 새일센터 구직·취업 실적

(단위 :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구인	488,757	511,953	509,326	576,043	557,488	547,082
구직	469,891	483,802	540,396	552,198	572,560	553,590
취창업	171,125	173,064	177,592	176,866	180,610	161,772

표-15. 새로일하기 여성인턴 실적

(단위 : 명)

연도	연계인원	인턴종료 후 취업현황			
		종료	취업	미취업	취업률
2022	10,145	8,298	8,027	271	96.7%
2021	11,761*	9,611	9,312	299	96.9%
2020	6,945	5,812	5,658	154	97.4%
2019	7,351	6,063	5,853	210	96.5%
2018	7,410	5,859	5,618	241	95.9%

연도	연계인원	인턴종료 후 취업현황			
		종료	취업	미취업	취업률
2017	7,201	5,959	5,785	174	97.1%

*추가경정예산 포함

표-16. 경력단절예방 지원실적

(단위 : 개소, 건, 개사)

연도	운영 센터수	합계	실적	
			재직여성	기업
2022	75	76,848	73,491	3,357
2021	75	70,272	67,897	2,375
2020	60	49,688	47,887	1,801
2019	35	41,174	40,168	1,006
2018	15	16,442	15,897	545
2017	15	13,239	12,793	446

표-17. 직업교육훈련 실적

(단위 : 개, 명)

연도	교육과정	교육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취업인원	취업률
2022	718	12,586	11,919	94.7%	8,892	74.6%
2021	738	12,573	11,998	95.4%	8,800	73.3%
2020	658	11,023	10,532	95.5%	7,770	73.8%

연도	교육과정	교육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취업인원	취업률
2019	745	14,544	13,924	95.7%	10,008	71.9%
2018	754	14,796	14,060	95.0%	10,258	73.0%
2017	791	15,753	14,788	93.9%	10,829	73.2%

표-18.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및 이용 아동 증감

(단위: 개소, 명)

구 분	2017.10.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설 수	3,118	3,602	4,324	4,958	5,437	5,801
아동 수	186,178	200,783	232,123	253,251	268,967	276,670

표-19. 공공부문 의사결정직위 여성 비율

(단위 : %)

부문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6.5	6.7	7.9	8.5	10.0	11.2
국가직 본부 과장급(4급 이상)	14.8	17.5	20.8	22.8	24.4	26.4
지방직 과장급 (5급 이상)	13.9	15.6	17.8	20.8	24.3	27.4
공공기관 임원	11.8	17.9	21.1	22.1	22.5	23.6
공공기관 관리자 ¹⁾	18.8	23.8	25.1	26.4	27.8	28.8
지방공기업 ²⁾ 관리자	4.9	6.9	9.1	10.6	11.8	12.9
국립대 교수 ³⁾	15.8	16.6	17.3	18.1	18.9	20.2

부문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장·교감	40.6	42.7	44.1	44.5	45.8	46.4
군인 간부	5.5	6.2	6.8	7.5	8.2	9.0
일반경찰	10.9	11.7	12.6	13.4	14.2	15.1
관리직	—	5.9	6.1	6.5	6.5	5.7
해양경찰	11.3	12.0	12.7	13.2	14.5	16.6
관리직	—	2.2	2.5	2.7	3.1	3.6
정부위원회 ⁴⁾	40.2	41.9	43.0	43.2	42.4	41.4

1) '관리자 정원 중 여성 수'에서 '관리자 현원 중 여성 수'로 변경('17년 기준과 동일)

2) ('18년) 300인 이상(25개)→('19년) 전체(151개)로 확대

3) 「고등교육법」상 국립대 교수

4) 정부위원회 법정기준(40%)

표-20.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1)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결과

(단위: 건수)

구분		점검대상 (개소)	적발			
			계	시정지시	사법처리	기타
2020	정기	80	51	49	2	0
2021	정기	102	66	66	—	0
2022	계	236	256	253	1	2
	정기	198	180	179	—	1
2022	수시	38	76	74	1	1

(2) 주요 적발 내용

(단위: 건수)

구분		계	노동조합법	근로자참여법	근로기준법	기타
'20	정기	51	13	21	7	10
'21	정기	66	12	16	12	26
'22	정기	180	21	67	60	32
	수시	76	20	24	31	1

표-21.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권리구제 현황

연도	접수	처 리							이월 (진행)
		합계	판 정				화해	취하	
			소계	인정	기각	각하			
'20	1,450	1,156	741	86	627	28	102	313	294
'21	1,270	1,082	716	86	572	58	80	286	188
'22	934	786	533	85	427	21	73	180	148

표-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천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급자 수	1,582	1,744	1,881	2,134	2,360	2,451

표-23.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천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078	3,456	4,435	5,401	6,331	7,228	8,108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623	1,037	1,330	1,620	1,899	2,168	2,4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831	1,382	1,774	2,160	2,532	2,891	3,24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977	1,624	2,084	2,538	2,975	3,397	3,811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1,039	1,728	2,217	2,700	3,165	3,614	4,054

표-24. 연도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 사업 및 기관 수

구분		평가사업	평가대상 수		
			합계	자체평가	현장평가
1기	2013	노인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1,850개	1,850개	702개
	20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18개)	1,634개	1,634개	740개
	20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3개, 비표준 26개)	1,366개	1,366개	513개
2기	2016	노인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1,897개	1,897개	705개
	201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10개, 비표준 8개)	2,096개	2,096개	734개
2기	201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4개, 비표준 7개)	2,471개	2,471개	660개

구분		평가사업	평가대상 수		
			합계	자체평가	현장평가
3기	2019	노인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2,030개	2,030개	836개
	202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10개, 비표준 7개)	2,734개	2,734개	1,089개
	202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7개, 비표준 4개)	2,951개	2,951개	1,347개
4기	2022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1,098개소	1,098개소	1,098개소
	20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예정)	4,933개소	4,933개소	2,220개소

※ 표준: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표준모델(2023. 현재 14개)

※ 2012년도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종, 서비스 제공기관(357개) 대상 평가

표-25. 건강보험 연도별 보장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장률(%)	62.7	63.8	64.2	65.3	64.5

표-26. 국민연금 가입자 수 : 2,249만 명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총가입자		22,216,229	22,107,028	22,347,586	22,497,819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1,949,286	2,039,009	2,137,619	2,195,391
	가입자	14,157,574	14,320,025	14,580,825	14,785,761

구분	2019	2020	2021	2022
지역가입자 등	8,058,655	7,787,003	7,766,761	7,712,058

※ 출처: 국민연금공단 월별 통계자료

표-27. 국민연금 수급자 수 : 664만 명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2022.12. ¹⁾		총 계 ²⁾ ('88년~'22년)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계		6,642,643	34,020,076	18,430,656	288,575,327
연 금	소 계	6,424,917	32,817,226	7,406,659	263,671,831
	노 령	5,396,729	29,544,090	6,123,001	228,571,991
	장 애	76,718	391,377	195,490	6,415,221
	유 족	951,470	2,881,759	1,088,168	28,684,619
일시금	소 계	217,726	1,202,850	11,023,997	24,903,497
	장 애	2,722	49,853	87,902	905,343
	반 환	199,170	1,074,442	10,700,545	23,254,813
	사 망	15,834	78,555	235,550	743,340

주1) 수급자이었던 자(소멸자)를 포함한 2022년 12월 수급자 수 및 급여지급액

주2) '88년~'22년까지의 수급자이었던 자(소멸자)를 포함한 누계기준 수급자 수 및 급여지급액

※ 출처: 국민연금공단 월별 통계자료

표-28.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신고 건수	13,309	15,482	16,071	16,973	19,391
노인학대 판정 건수	4,622	5,188	5,243	6,259	6,774
일반사례 건수	8,687	10,294	10,828	10,714	12,617

※ 일반사례는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심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뜻함

표-29. 노인학대 관련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7,306	7,597	8,561	9,445	10,366	11,535

표-30.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확충 현황

1)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단위 : 개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설치 현황	30	32	34	34	37	37
증설 개수	+1	+2	+2	-	+3	-
신설 기관	경북서남	서울서부 경기도	제주(서귀포) 인천서부	-	서울동부, 경북남부 경기북서부	-

2)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단위 : 개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설치현황	17	17	17	18	19	19
증설개수	+1	-	-	+1	+1	-
신설기관	서울북부	-	-	전남서부*	경북 서북부	-

※ 지방비 100% 운영 시설 1개소(전남서부) 포함

표-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접수 건수 (2018~2021)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2018		2019		2020		2021	
초·중·고교 직원	6,406	(70.0)	5,901	(66.8)	3,805	(34.7)	6,065	(25.9)
의료인·의료기사	325	(3.6)	293	(3.3)	363	(3.3)	549	(2.3)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11	(4.5)	337	(3.8)	711	(6.5)	702	(3.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56	(0.6)	38	(0.4)	46	(0.4)	47	(0.2)
보육교직원	213	(2.3)	448	(5.1)	182	(1.7)	241	(1.0)
유치원교직원, 강사	115	(1.3)	140	(1.6)	140	(1.3)	216	(0.9)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8	(0.2)	32	(0.4)	42	(0.4)	35	(0.1)
소방구급대원	24	(0.3)	32	(0.4)	25	(0.2)	36	(0.2)
성매매피해시설상담 종사자	8	(0.1)	4	(0.0)	3	(0.0)	1	(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4	(0.2)	16	(0.2)	30	(0.3)	26	(0.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283	(3.1)	125	(1.4)	210	(1.9)	79	(0.3)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11	(2.3)	266	(3.0)	347	(3.2)	230	(1.0)

신고의무자	2018		2019		2020		2021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25	(0.3)	26	(0.3)	51	(0.5)	45	(0.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	—	632	(5.8)	7,493	(32.1)
아동복지전담공무원	72	(0.8)	200	(2.3)	984	(9.0)	1,097	(4.7)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	—	—	—	2,394	(21.8)	5,785	(24.8)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31	(0.3)	67	(0.8)	91	(0.8)	54	(0.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52	(0.6)	82	(0.9)	61	(0.6)	53	(0.2)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48	(0.5)	63	(0.7)	65	(0.6)	59	(0.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168	(1.8)	128	(1.4)	83	(0.8)	46	(0.2)
응급구조사	0	(0.0)	1	(0.0)	1	(0.0)	3	(0.0)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276	(3.0)	286	(3.2)	280	(2.6)	212	(0.9)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121	(1.3)	105	(1.2)	87	(0.8)	117	(0.5)
아이돌보미	11	(0.1)	11	(0.1)	21	(0.2)	26	(0.1)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255	(2.8)	225	(2.5)	308	(2.8)	139	(0.6)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4	(0.0)	9	(0.1)	10	(0.1)	10	(0.0)
입양기관 종사자	4	(0.0)	1	(0.0)	1	(0.0)	6	(0.0)
계	9,151	(100)	8,836	(100)	10,973	(100)	23,372	(100)

※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표-32.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의 비교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종류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1.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1.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병과 기능)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법」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병과 기능)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표-33.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12.
개소	—	—	292	747	852

표-34.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소	62	67	69	77	85

표-35.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소	65	73	74	98	125

표-36. 위탁가정 주요 홍보실적

2021	매체홍보	보도자료 배포('21.3.), SBS TV공익광고('21.3~4.), CBS라디오 캠페인('21.3.~4,'21.11.), 지자체 전광판 활용('21.3.) 등
	온라인 포털 홍보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홍보영상·리플렛 등 게시('21.3.) 온라인 포털광고('21.3.~4.), 유튜브 CJ ENM채널 광고('21.7.~8.) 등

2022	매체홍보	보도자료 배포('22.5.), SBS TV공익광고('22.5.~6.), 유튜브 채널 송출('22.5.), CBS라디오 캠페인('22.12.)
	온라인 홍보	전문가정위탁 신청 웹포스터 제작·배포('22.7.), CU편의점 POS기에 공익광고 영상 게시('22.10.~'23.1.)
	기타	유관기관 홈페이지·SNS 홍보(3건), 유관기관 안내서 사업자료 게재('22.9, 2건), 리플렛 배포 등

표-37. 상수도 관련 민원수(수질, 단수, 누수)

(단위 : 건수)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질민원	126,909	21,223	23,352	30,994	24,767	26,573
단수민원	96,960	16,028	28,829	16,214	16,330	19,559
누수민원	556,560	102,150	117,486	104,219	105,082	127,623

표-38.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누적 정비물량

(단위 : km)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누적 정비물량	—	99	397	699	1,340	1,809

표-39. 정수장별 맞춤형 기술지원

(단위 : 건수)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술지원	581	56	40	42	124	152	167

표-40. 오염 우려지역 수질검사 결과

(단위 : 개소, %)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질검사 결과(개소)	12,528	2,061	2,142	2,019	2,104	2,100	2,102
초과관정(개소)	7,008	1,345	1,377	920	1,125	998	1,243
초과율(%)	56.0	65.3	64.3	45.6	53.5	47.5	59.1

※ 초과관정 : 식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관정

표-41. 급수 취약지역 관정개선 개선효율

('23. 7월 기준, 단위 : 개소, %)

환경개선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독 및 주변 청소(개소)		—	1,503	2,048	2,010	2,005	2,297
시설 개선(개소)		100	102	103	113	160	151
수질 초과율(%)	개선 전	—	49.2	36.9	19.6	18.6	58.8
	개선 후	—	11.7	5.9	3.8	1.8	6.6
환경개선 개선효율(%)		—	76.2	84.0	80.6	90.3	88.8

※ 예방목적의 수행을 제외한 개선 전·후 수질결과(충대장군군) 대비 개선효율 산출

※ 충대장군군 : 수질초과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대표적인 지표오염원 항목

표-42.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

(단위 : 만 호)

연도	총 임대 주택	공공임대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								
		소계	국가 (LH)	지 자 체	민간공공 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소계	5년	10년	소계	단기	준공공	기업형	장기 일반	공공 지원
2017	244.5	128.2	101.7	26.5	16.0	8.7	7.3	100.3	86.8	5.7	7.8	—	—

연도	총 임대주택	공공임대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								
		소계	국가 (LH)	지자체	민간공공 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소계	5년	10년	소계	단기	준공공	기업형	장기 일반	공공 자원
2018	298.5	138.8	111.8	27.0	18.2	8.2	10	141.5	102.3	14.8	9.8	13.3	1.3
2019	304.4	148.9	120.2	28.7	17.1	7.1	10	138.4	94.5	11.6	9	21.8	1.5
2020	327.0	159.4	128.1	31.3	14.3	4.5	9.8	153.3	53.0	—	—	94.7	5.6
2021	329.0	166.8	133.3	33.5	11.2	2.8	7.4	151.5	43.4	—	—	100.6	7.4

※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 재구성

표-43. 근로자건강센터 및 트라우마센터 심리상담 지원실적

(단위 : 건)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근로자건강센터	46,857	47,814	35,917	21,519	25,499	25,606
트라우마센터	—	719	911	1,932	4,218	4,320

표-44. EAP서비스 지원실적

(단위 : 건)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인	10,209	8,427	11,415	10,991	11,088	12,225
기업	1,864	2,633	2,561	270	294	414

표-45. 실업·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실적

(단위 : 건)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심리안정지원	46,423	49,574	56,943	46,323	62,938	64,397

표-46. 연도별 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정보제공 지원

(단위 :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3.
임신 유지종결 상담	—	—	—	1,874 (‘21.7. 시행)	3,830	924
임산출산육아 등 종합정보제공	12,330	13,821	13,576	13,459	14,853	3,583
임산부 약물상담	13,722	15,729	15,011	18,833	24,758	5,676

표-47. 무상교육 대상 학생(교육부 예산안 기준)

(단위 : 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 학생	487,496	877,512	1,240,938	1,203,386	1,197,019

※ 2019년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교육 비용 지원

표-48.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단위: 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학생 수	92,958	92,420	98,154	103,695	109,703

표-49. 특수학교(급) 확대

(단위: 학급 수)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특수학교(교)	177	182	187	192	194
특수학급(개)	429	556	381	670	575

※ 특수학교 신설 현황: ('19) 2교 → ('20) 5교 → ('21) 5교 → ('22) 5교 → ('23) 2교

표-50.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추진 내용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등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운영 지원('16~'21년, 연간 4개교) • 교원의 문화다양성 역량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6년~) • 문화기관종사자, 문화콘텐츠제작자 등 전문인력 대상 직무 연관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15년~) • 일반인 대상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연계 문화다양성 이해 강좌 운영('22년~)
문화다양성 주간 계기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지정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을 기념해 문화다양성 주간을 지정(5.21~5.27, 문화다양성법 제11조)하고,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15년~)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화 주체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국·적·지역·세대 등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민 간 상호 교류·소통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12년~, 전국 20여개 지역) • 이주민이 직접 기획·추진(14개국 교민회 참여)하는 문화다양성 축제 MAMF(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개최 지원으로 이주민의 문화권 보장 및 내·외국인 교류 증진('05년~)

표-51. 문화다양성 사업 참여자의 문화다양성 인식 정도 (2019~2022)

연도	만족도(%)	사전 인식도 (점/100점 만점)	사후 인식도 (점/100점 만점)	사전-사후 인식변 화율(%)
2019	85.9	69.6	76.6	10.1
2020	82.4	67.4	76.2	13.1
2021	85.0	71	83.8	18.0
2022	86.7	73.2	84.3	15.2
평균		70.3	80.2	14.1

표-52. 최근 5년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합계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지급	임금 외 금품	자금 융자	정년	퇴직	해고	기타
누계	36,504	10,507	1,547	2,060	185	654	429	1,680	392	8	267	283	876	2,126
2021	2,559	598	57	98	6	60	42	137	18	1	9	11	38	121
2020	2,426	704	60	109	9	50	36	191	22	-	3	1	25	198
2019	2,730	852	60	110	22	66	34	223	31	1	11	27	31	236
2018	2,209	603	75	112	23	48	31	89	24	-	6	10	48	137
2017	3,170	797	76	183	20	41	39	136	37	-	3	36	71	155

연도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이용 등 차별			성희롱				기타
	소계	용역	재화	교통 수단	상업 시설	토지	주거 시설	소계	교육 시설	직업 훈련 기관	소계	고용 관계	업무 관계	그 밖의 관계	
누계	14,771	5,818	5,806	1,458	1,158	39	492	1,956	1,826	130	771	525	45	201	8,499
2021	1,234	617	276	62	126	4	149	75	68	7	208	138	13	57	444
2020	1,192	404	399	286	73	2	28	90	79	11	217	152	13	51	223
2019	976	403	369	53	121	—	30	107	94	13	309	204	19	86	486
2018	1,056	523	365	70	83	1	14	95	84	11	—	—	—	—	436
2017	1,232	590	285	212	111	4	29	131	124	7	—	—	—	—	1,007

연도	합계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지급	임금 외 금품	자금 융자	정년	퇴직	해고	기타
누계	38,544	11,052	1,583	2,150	191	843	450	1,903	415	8	278	279	885	2,067
2022	2,036	726	37	95	7	193	21	223	24	—	11	3	23	89
2021	2,564	597	56	98	6	60	42	137	18	1	9	11	38	121
2020	2,426	704	60	109	9	50	36	191	22	—	3	1	25	198
2019	2,730	852	60	110	22	66	34	223	31	1	11	27	31	236
2018	2,208	573	75	112	23	47	31	89	24	—	6	10	45	111

연도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이용 등 차별			성희롱				기타
	소계	용역	재화	교통 수단	상업 시설	토지	주거 시설	소계	교육 시설	직업 훈련 기관	소계	고용 관계	업무 관계	그 밖의 관계	
누계	15,653	6,091	6,117	1,537	1,345	41	522	2,039	1,901	138	2,501	1,750	70	681	7,299
2022	882	273	306	79	191	3	30	91	80	11	171	126	2	43	166
2021	1,240	623	278	62	125	3	149	75	68	7	210	142	12	56	442
2020	1,192	404	399	286	73	2	28	90	79	11	217	153	10	54	223
2019	976	403	369	53	121	—	30	107	94	13	309	208	16	85	486
2018	1,054	521	365	70	83	1	14	92	82	10	255	189	9	57	234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합계

표-53. 젠더마커 적용 비중 (승인금액 기준)

(단위 : 백만 불,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승인액	165	343	490	235	571	935
비 중	11.4	19.4	22.0	31.7	25.0	35.7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근로자건강센터	46,857	47,814	35,917	21,519	25,499	25,606
트라우마센터	—	719	911	1,932	4,218	4,32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인	10,209	8,427	11,415	10,991	11,088	12,225
기업	1,864	2,633	2,561	270	294	414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심리안정지원	46,423	49,574	56,943	46,323	62,938	64,397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영문본)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hereby submits its fifth periodic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and 17 thereof. This report outlines the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to implement the ICESCR from October 2017 to October 2023, with reference to the Guidelines on Treaty-Specific Documents to be Submitted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8/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2/268 an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following the review of the fourth periodic report (E/C.12/KOR/CO/4).
2. Drafting of the report was direc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MOJ), based on the data from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In preparing the report, the MOJ organized a consultation meeting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n 18 August 2023. Each ministry and agency reviewed the opinions from the meeting, reflected some of the views and finalized the report.

General Obligations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

3. **Regarding Recommendation 6(a)**, in 2022,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an evaluation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3rd NAP (2018-2022) and published the final report on the MOJ's official website.
4. **Regarding Recommendation 6(b)**, the Government has worked to incorporate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mmittee) into the 3rd NAP. For those have not yet fully incorporated,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make its efforts to improve domestic conditions to do so. Furthermore, the 3rd NAP stipulates that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shall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hereof, implement it in good faith and collaborate for its smooth implementation'.
5. **Regarding Recommendation 6(c)**, the Government ensures the participation of NHRC and civil society, pursuant to the Regulations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Presidential Decree),¹ which sets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NAP. The Government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4th NAP, aligning it with the human rights policy framework of the new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responding to new and emerging issues.

Application of the ICESCR

6. **Regarding Recommendation 8(a)**, the Government is awareness of the ICESCR and the rights enshrined therein. This effort extends to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judiciary,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ensuring the full incorporation of the ICESCR into the domestic legal framework,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7. The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remains committed to offering training sessions on the rights in the ICESCR and considerations in social rights-related trials to judges and others who are

¹ Articles 3 (Composition), 6 (Subcommittees), 10 (Advisors) and 11 (Request for Cooperation, etc.)

interested. The Institute will continue to offer training courses and organize sessions on the ICESCR to raise awareness on the ICESCR and its significance. (Annex, Table 1).

8. Since 2018, the Institute of Justice has added human rights training courses into the foundational training program for prosecutors. The speci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courses, in particular, are designed to foster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issues in the different area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eigners and North Korean defectors. (Annex, Table 2).
9. In April 2023, the MOJ organized ‘UN Human Rights Mechanism Workshop’ which was designed to improve understanding of public officials on UN human rights mechanisms including national reporting and follow-up mechanisms, the treaty bodies and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Officials from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ody also participated the workshop.
10. **Regarding Recommendation 8(b)**, the Government regularly organizes public events, including forums, seminars and symposium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o stimulate public discourse on the ICESCR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major international/domestic human rights issues.² These initiatives also aim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and discussions in the national mechanism for reporting and follow up through various meetings and public hearings. Moreover, the MOJ’s website provides the full text of the ICESCR, the Government’s previous reports and the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translated into Korean.
11. **Regarding Recommendation 8(c)**, the current Constitution stipulates rights that are also guaranteed under the ICESC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22), the right to education (Article 31), the right to work (Article 32), three rights related to work (Article 33), and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Article 35), among others. In 2018, a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was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NA), seeking to strengthen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social rights. However, the bill did not pass due to a lack of quorum.
12. There are some of the court decisions directly referred some of the provisions of ICSECR, such as anti-discrimination (Article 2-2), labor rights (Article 8), family protection rights (Article 10) and cultural diversity (Article 15). More details are provided in Annex, Table 3.

Access to Remedies

13. **Regarding Recommendation 10**, Article 128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a legal aid system for individuals with insufficient financial means to cover litigation costs, ensuring that the right to a fair trial is practically guaranteed by the State. The budget allocated for legal aid has seen a consistent increase, rising by approximately 30% from 2017 to 2021 and the number of cases supported by legal aid has shown significant increase from a total of 8,090 in 2017 to 17,665 in 2021. (Annex, Table 4).

Maximum Available Resources

14. **Regarding Recommendation 12(a)**, statistics on public social welfare expenses is described in Annex, Table 5.

² 4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mposium, ‘A New Paradigm for Human Rights Policy: How to Create a Human-Centered Information Society?’ (2018), 5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mposium, ‘How to Respond to the Spread of Hate Speech?: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Learning from International Cases’ (2019), 1st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um, ‘Business and Human Rights: Trends and Challenges’ (2020), 2nd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um, ‘Protect, Respect, Remedy’ (2021), Seminar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Searching for the ways for domestic implementation of BHR with the spread of ESG discourse’ (2022).

Anti-corruption

15. **Regarding Recommendation 14**, the Government enacted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in 2011 to ensure strict confidentiality and identity protection for whistleblowers.³ Subsequent amendments have been made to address deficiencies in the law. The scope of laws related to public interest infringement acts subject to public interest reporting has significantly been expanded, from 180 at the time of enactment to 471 in 2021.⁴
16.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as been effective since September 2016. By 2022, a total of 13,524 violation reports were received by public institutions at all levels, comprising 8,211 (60.7%) cases of improper solicitation, 4,900 (36.2%) cases of graft, and 413 (3.1%) cases of excessive honoraria for outside lectures. (Annex, Table 6)
17. The Government amend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2022, adding ‘selection of apprentices and scholarship students’, ‘examination of theses and granting of degrees’, and ‘prison officer duties such as guidance, treatment and correction of prisoners’ to the list of jobs that are subject to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introduced the ‘non-real name reporting by proxy’, allow citizens to appoint ‘proxy’ lawyers to report on their behalf in order to keep confidentiality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18. The Government manages reported corruption cases and identifies corruption-prone areas through the Clean Portal system, which is a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information system for public to report online and access relevant anti-corruption information. It collects reports on violations, handles reporting statistics, monitors the public officials at all levels including those who were dismissed due to corruption, and checks the vulnerable areas of corruption, preemptively addressing the corruption issues. (Annex, Table 7-8)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19. **Regarding Recommendation 21(a)**, the Government remains committed to increasing the ODA to GNI ratio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spite recent fiscal consolidation,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its ODA budget by 21.3% in 2023. Since join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expanded ODA volume by 11.1%, the second highest average annual growth rate among the members. In 2021, the ODA volume reached USD 2.87 billion, which is more than double the USD 1.17 billion spent in 2010. However, the ODA/GNI target (0.7%) of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needs to be pursued in a long-term perspective, considering circumstances such as the fiscal conditions of the Government.⁵ Aligned with the Strategic Plan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under the Yoon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seeks to increase the ODA/GNI ratio by continuously expanding the volume of ODA to the 10th largest in the world.
20. **Regarding Recommendation 21(b)**, the Government shares the necessity of increasing grant shares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Yet,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growing demand for concessional loans from LDCs for building infrastructure. From 2012 to 2021, the average ratios of loans to grants for the LDCs is 47 to 53 without much variation. The Government selects recipient countries considering the capacity of foreign debt repayment, OECD country risk classifications, etc., when providing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and provides loans with higher concessionality rates to the LDC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³ Enacted in 2011.

⁴ On October 31 2017, five new laws were added, bringing the total to 284. On May 19 2020, 183 new laws were added, totaling 467 and on April 20, 2021, four new laws were added, totaling 471.

⁵ As of 2021, Korea's ODA/GNI ratio is 0.16%, ranked 25th out of 29 DAC members (DAC average: 0.33%).

21. In accordance with the 3rd Comprehensive Strate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1-2025), the Government seeks to maintain a 40 to 60 ratio of concessional loans to grants on a grant equivalent basis with annual adjustments as needed within a certain range, and will continue to be committed to achieving an appropriate ratio over time..

Article 2 Non-discrimination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22. **Regarding paragraphs 23 and 25(c)**, four draft bills⁶ for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which includes the provision state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s areas and grounds of discrimination were presented to the 21st NA. A public hearing with regards to those bills was held at NA in May 2022.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3. **Regarding Recommendation 25(a)**,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shall not be applicable to the cases of consensual anal intercourses or other similar acts between same-sex military persons in private spaces that do not directly and specifically harm the military community's well-being and discipline.
24. **Regarding Recommendation 25(b)**, there was a landmark second-trial ruling to recognize a same-sex partner as a dependent of an employee eligible for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⁷ However, Supreme Court's decision is still pending. The issue of whether a same-sex partner can be considered to receive spousal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requires further careful consideration.
25. **Regarding Recommendation 25(d)**, the NHRC has participated in the events each year since the 18th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in 2017. To deliver messages of solidarity with the LGBTQI community and combat hate and discrimination, the Commission has displayed rainbow banners at its building and broadcasted rainbow electronic boards during the festival. In 2019, the commission conducted the 'Mazoo (encountering) Campaign' to promote an anti-hate and anti-discrimination culture against minorities, including LGBTQI. Additionally, in May 2022, a TV program about anti-discrimination was aired on the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 in collaboration with a local broadcasting company.

Foreigners

26. **Regarding Recommendation 27**, the Government is advocat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a 'birth registration system of foreign children' to guarante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irrespective of their parents' status of residence. A bill on Birth Registration of Foreign Children was introduced to the NA in June 2022. This bill is designed to allow parents, etc., to register the birth of a child, who is not granted Korean nationality, yet born in Korea and apply for peruse and issue of the certificate to prove the child's birth and identity. Another bill which prescribes obligations of healthcare professionals including doctors and midwives to notify the birth to mayors, governors and head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eup, myeon*) was proposed in June 2023, and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at NA.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birth registration system, the Government launched alternative policies, such as

⁶ Bill on Anti-Discrimination (Bill No. 2101116, proposed by Representative Jang Hye-young); Bill on Equality (Bill No. 2110822, proposed by Representative Lee Sang-min); Bill on Equality (Bill No. 2111964, proposed by Representative Park Joo-min); Bill on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Bill No. 2112330, proposed by Kwon In-Sook)

⁷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2Nu32797 rendered on February 21, 2023.

the reporting period for unregistered children, nationwide inspection of newborn babies with temporary numbers for immunization. From August 23 to October 6 2023, the national child censu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whereabouts, the registration status and parenting conditions of 5,183 foreign children born in South Korea from 2015 to 2023.

27. The MOJ operates a website, Hi-Korea (www.hikorea.go.kr) providing foreigners with information on key aspects of everyday lives, such as housing, transportation, education and healthcare. To make it easier for foreigners to live their lives and exercise the rights while living in Korea,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Standard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foreigners’,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basic personal data on passports to administrative agencies when entering Korea. In addition, the Government offers customized training courses to the growing population of foreign residents and permanent residents to increase the knowledge of their rights as members of the society and to support early social integration.
28. The Basic Living Security Benefit (BLSB) is provided primarily to Korean nationals, but foreign nationals shall also become a recipient if they meet certain criteria outlined in the Basic Living Security Act. For instance,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South Korea who are married to a Korean national and either they or their spouse is pregnant or raising a child of Korean nationality are eligible for BLSB. As of 2022, a total of 6,842 foreigners are receiving BLSB.
29. Any foreigner who has stayed in Korea for over six months, and/or meets other specific requirements, is subject to mandatory subscription to health insurance.⁸ The number of foreign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increased from 950,000 in December 2018 to 1.32 million in December 2022. However, for self-employed subscribers, household composition is limited to spouses and minor children, insurance fees are calculated higher than the average. This is due to difficulties in verifying the income and assets, household composition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rough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Nevertheless, for foreigners with a living base in Korea and expected to stay for an extended period, such as permanent residents, those with marriage immigration status and refugees, health insurance premiums are calculated based on their income and assets identified in Korea, similar to Korean nationals. Additionally, premiums are reduced for foreigners residing in rural areas or with humanitarian status.
30. COVID-19 diagnostic tests and vaccinations were provided free of charge to all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The Government advised that there would not be any disadvantages related to their stay as information on diagnostic tests and vaccinations will not be reported to immigration authorities
31. Since 2021, migrant workers who enter Korea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subject to mandatory subscription to employment insurance in phases. The number of subscribers are consistently increasing.
32. In April 2019, the amendments to the Immigration Act were made to grant a humanitarian status (G-1) to foreign children and their guardians undergoing court’s trial, investigations or other remedial procedures for child abuse according to relevant laws. The amended provisions allow them to stay in the country until the judicial process is completed with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extensions if necessary for recover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stay period.

⁸ Implemented in July 2019.

Article 6 Right to Work

Article 7 Right to Just and Favorable Working Conditions

Non-Regular Workers

33. **Regarding Recommendation 29(a)**, the current labor-related laws already cover subcontracted and dispatched workers. Yet, as for persons in special type of employment,⁹ due to unclear concepts and various service types within and between occupations, the application of labor-related laws require careful consideration through further studies and public discussions. There are only some occasions where the persons in special type of employment are eligible for employment insurance¹⁰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¹¹, and where recognized as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the Labor Standards Act, they are protected under the Acts, but otherwise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s not applicable to the persons in special type of employment. The Government plans to work on legislation to safeguard the minimum rights of all labor providers, including persons in special type of employment. In the meantim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nacted in January 2021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by stipulating punishment for the management responsible for violating their obligations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cause personal injury, and those protected by the Act include ‘person who provide labor’, including subcontractors and other persons in special type of employment.
34. **Regarding Recommendation 29(b)**, Article 28 of the Labor Standards Act, etc. allows a fixed-term worker whose contract renewal was unfairly denied to pursue rights redress through procedures before the Labor Commission and the courts. If a dismissal is deemed to be unfair, the employee is entitled to reinstatement and wages that the employee would have received if he or she had provided labor during the period of dismissal. Given that such procedures for unfair denial of a contract renewal are already in place, introducing additional legislative measures may be challenging. Moreover, adding penalty provisions solely for the unfair dismissal of fixed-term workers may not be considered as fair compared to the unfair dismissal of indefinite term contract workers, since the employer is only obliged for reinstatement and wage compensation without additional criminal penalties.
35. **Regarding Recommendation 29(c)**, to ensure the legitimacy and compliance of the worker dispatch services, and to rectify any illegal dispatch contracts where they are in the form of service provision and subcontract but constitute worker dispatch in practice, the Government is conducting labor inspections, especially targeting those workplaces utilizing the dispatching and internal subcontracting systems. If a person is recognized as illegally dispatched, the company must directly employ them. When failing to do so, the company will be fined up to KRW 30 million. Also,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is on the mandatory inspection agenda in all labor inspections. Regional ministries and offices of employment and labor have designated supervisors specialized in discriminatory actions, offering on-site guidance and inspections, addressing workplace discrimination. (Annex, Table 9)

Application of Labor Act

36. **Regarding Recommendation 31**,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is in principle applicable to all industries.¹² In June 2021, the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 Workers (DWA) is

⁹ Approximately 560,000 as of 2022.

¹⁰ Applicable to 19 occupations from July 2022 to October 2023.

¹¹ Applicable to 18 occupations from July 2022 to October 2023.

¹² Yet, there are exceptions for domestic workers (Article 11) and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y workers (Article 63).

in force to enhance the working conditions and stabilize the employment status of domestic workers.¹³ In order to bring more companies that are currently engaged in domestic service work into the scope of the DWA, the Government operates the Domestic Service Support Center to provide domestic worker trainings, grievance and legal counseling and has been engaging in various publicity activities for the system.¹⁴ However, exemptions were made for the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ing sectors since the work is performed against natural objects and due to the difficulty in measuring and controlling working hours influenced by industry-specific factors such as climate and season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plans to review th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Proper Wage

37. **Regarding Recommendation 33**, all workplaces are subject to annual inspections, including monitoring of the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standards. If the wage is below the standards, correctional measures are immediately ordered. Should the employers fail to address the issue, the Government will proceed with legal action.¹⁵ Various strategies, including publicity, guidance, counseling and support for minimum wage compliance, are employed for on-site compliance.
38. The Minimum Wage Committee engages in deliberations to establish a minimum wage at a reasonable level, considering economic conditions and income distributions, etc. comprehensively by collecting opinions on the field, surveys and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Consequently, the proportion of low-wage workers decreased,¹⁶ and the wage quintile share ratio also decreased,¹⁷ indicating a narrowing wage gap between workers. The scope of the Minimum Wage Act has continuously expanded since its enactment, applying to all workplaces employing workers since 2000.¹⁸ (Annex, Table 10)

Gender Pay Gap

39. **Regarding Recommendation 34**, the Government has officially designated ‘Gender Equality Pay Day’¹⁹ as a statutory holiday since 2020, and mandates the annual publication of gender-based wage statistics. (Annex, Table 11-12)
40. The existing affirmative action (AA) requested to submit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gender pay gap and the analysis on the cause of disparity exclusively for underperforming workplaces. Since 2020, the system has been improved by extending the submission requirement to encompass all AA workplaces. The Gender Employment Equality Act was amended in May 2021 to provide for a system whereby the Labor Commission can make corrective orders to employers to stop discriminatory

¹³ Enacted in June 2021 and in effect since June 2022, domestic workers are subject to the Labor Relations Ac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domestic services, it is difficult to uniformly grant breaks, so by incorporating field opinions, it was stipulated that breaks can be autonomously guaranteed according to individual circumstances through contracts between the provider and the user. On the other hand, it was stipulated that the minimum working hours of 15 hours or more per week should be guaranteed, and paid weekly holidays and annual paid leave should be applied.

¹⁴ In October 2023, a total of 67 domestic service providers were certified under the DWA.

¹⁵ Imprisonment up to three years or a fine up to KRW 20 million for paying below minimum wage pursuant to the Minimum Wage Act. Enforcement statistics: 2,901 cases (1,108 prosecuted) in 2020; 2,233 cases (901 prosecuted) in 2021; and 1,897 cases (743 prosecuted) in 2022. The case count includes cases of partial and suspended prosecution.

¹⁶ Proportion of low-wage workers decreased from 22.3% in 2017 to 15.6% in 2021 (Proportion of low-wage workers: Proportion of those who earn less than 2/3 of median income)

¹⁷ Wage quintile share ratio decreased from 5.06 times in 2017 to 4.35 times in 2021 (wage quintile share ratio: the average wage of the top 20% / the average wage of the bottom 20%)

¹⁸ Yet, they are not applicable to domestic workers (Article 11 of the Labor Standard Act) and sailors and ship owners subject to minimum wage under the Seafarers Act.

¹⁹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n, 1 through 7 September of every year is designated as Gender Equality Week and Gender Equality Pay Day shall be Thursday of the week.

treatment, improve working conditions or provid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n June 2022, the concept of wages was refined to ‘remun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withi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dditionally, the survey scope was revised to exclude the employees on the long-term leave in previous year, the employees who joined the workplace in the middle of the year and short-term workers to rais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on the gender pay gap.

Women’s Career Interruptions

41. **Regarding Recommendation 35(a)**,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and MOEL jointly established the Third Basic Plan for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2020-2024). This plan endeavors to ‘establish a social support system for women’s career maintenance and capacity development’, focusing on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to enhance the quality of women’s employment while internalizing measures to prevent career interruptions. In June 2022,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with Career Interruptions was fully amended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and Prevention of Career Interruption of Women to provide support for the re-employment of women with career interruptions, solidifying the legal foundation for policies aimed at preventing women from leaving the labor market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²⁰ (Annex, Table 13)
42. The ‘Women’s Reemployment Center’ is providing comprehensive employment support services such as job counseling, vocational training, internships and follow-up management after employment, etc. Currently, there are 159 centers operating nationwide.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 lifecycle-based career interruption prevention services - from pregnancy to reemployment. The Government is also promoting another career interruption prevention project that provides customized services for companies and for those who are experiencing and/or likely to experience career interruption. (Annex, Tables 14-16)
43. The Government is in support of the expansion of new advanced technology and high-value-adde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with high success rate of recruitment.²¹ In addition, there is an ongoing initiative to develop and disseminate community-base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tailored to regional core and base industries,²² aligned with regional and industry-specific manpower demand and future job prospects, facilitating women’s entry into quality employment and enhance their capacity. Future plans involve fostering an environment where women can sustain continuous employment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network among community-related organizations and sharing and disseminating best practices from companies that promote a work-life balance culture. (Annex, Table 17)
44. **Regarding Recommendation 35(b)**,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increase support to prevent career interruptions resulting from childcare. Notably, the Government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llowances for pre- and post-natal leave and miscarriage and stillbirth leave. Further, the Government introduced ‘spouse maternity leave allowances’, ‘childbirth benefits for persons without employment insurance’ and ‘pre- and post-natal benefits for artists and the persons in special type of employment.’ The ‘3+3 parental leave system’²³ was introduced in 2022 to encourage men to participate more in

²⁰ The amendments to the act led to the expansion of policy targets and scopes, the insertion of definition of ‘prevention of career interruption’ and specification of business details, the survey on female economic activities and the publication of white papers.

²¹ The vocational training courses increased from 46 in 2017 to 66 in 2022, and to be increased to 74 in 2023.

²² Community-based courses, which were two in 2022, are to increase to six in 2023.

²³ If both parents take parental leave within the child’s first 12 months simultaneously or consecutively, parental leave salaries are increased

childcare, and, as a result, the number of men who took paternity leave increased by 38.2% from 27,423 in 2020 to 37,885 in 2022. To further assist working parents in childcare,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strengthen the support for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²⁴, as well as to increase the number of splitting paternity leave from 1 to 3.

45. Through the sustained policy of expanding both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centers, the childcare faciliti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corporate in-house day care centers also reached 76 in 2023, an increase of 16.9% compared to 2020, but actual improvements would only occur along with the changes among social, economic and organizational culture.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enhanc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as part of its main policy agenda, through measures such as expanding parental leave for both men and women, complemented by income compensation, and establishing a high-quality childcare environment through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and nursery schools. (Annex, Table 18)

Gender Representation

46. To enhance gender representation in decision-making roles, relevant ministries collaborative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Plan for Enhancing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Sector (2018-2022) across 12 key areas, including public service, institutions, military, police forces and government committees. As of the end of 2022, the percentage of women in national senior civil service rose from 6.5% in 2017 to 11.2% in 2022. Notably, the proportion of women holding the position of Deputy Director General or higher i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rose by 11.6%p from 2017 to 26.4% in 2022. (Annex, Table 19)
47. In 2019, the ‘Operation of Gender-Balanced Inclusive Growth Partnership’ project was launched to extend the efforts of the public sector plan for women’s representation to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to increase gender representation in corporate decision-making roles while raising the awareness among corporate stakeholders. Voluntary agreements were signed to promise corporate efforts to improve gender represent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female executives, and 48 agreements²⁵ were promoted through various media channels from 2019 to 2020.
48. In 2020, a special provision was introduc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requiring companies with a certain scale of total assets or more²⁶ not to have their boards of directors consist of a single gender. Furthermore, the K-ESG Guidelines released in 2021 incorporated the indicator of ‘board gender diversity’.
49. Since 2019, consulting services are offered to companies recognizing the need for improved gender diversity but facing challenges in implementation. The consultation involves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their personnel systems and organizational culture, providing guidance on enhancing gender-balanced personnel operations and organizational culture. Since 2023, under the initiative ‘Happy Together’ (*HamkkeDonghaeng*), the Government has been collaborating with private-sector companies to visit companies with outstand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to promote work-life balance, a culture of gender equality and ESG management in the workplac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50. The Government conducts ‘Equal Employment Labor Inspection’ for workplaces predominantly

in the system for the first three months.

²⁴ The Government plans to extend the age of the child (8 to 12 years old) and duration (up to 24 months per parent to up to 36 months).

²⁵ Signed agreements with 100 companies including subsidiary companies

²⁶ Stock-listed corporation that holds not less than 2 trillion KRW in total amount of assets.

employing women and those suspected of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When violations identified through inspections, corrective measures, fines and judicial proceedings are implemented, along with preventive guidance. From May 2022, a corrective system was introduced to address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²⁷ by mandating the labor commission to order correction such as suspending discriminative treatment,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or proper compensation.²⁸ The Government has expanded labor inspections to workplaces every year, with plans to conduct labor inspections over 1,000 workplaces in 2023.²⁹

51. An annual list is published identifying workplaces with inadequate implementation of AA and insufficient progress in improvement efforts and the Labor Commission correction system is introduced and under operation to rectify instances of discrimination.

Migrant Workers

52. **Regarding Recommendation 37**,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enhanced the workplace change system. Taking into account the instances where employment contracts may be terminated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workers are permitted to change workplaces three times³⁰ within the initial three years of employment to ensure additional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rkers. Should a migrant worker be unable to continue employment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ir responsibility, such as assault, non-payment of wages or violation of working conditions, they may change workplaces without the employer's permission, and this change is not included in the total number of workplace changes. Even in cases where evidence submitted by the migrant workers is not available or insufficient, the case is processed based on recognition by the Rights Protection Council³¹, ex-officio investigations by a local government office or 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by other organizations such as labor inspectors, etc. As a result, 99.8% (101,416) of the 101,668 applications for workplace change by migrant workers over the three years between 1 January 2021 and 30 June 2023 have been approved, and about 86.5% of these approvals were attributed to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tracts' through voluntary agreemen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dicating that many workplace changes are driven by the intentions of migrant workers.
53. The Government conducts regular guidance and inspections of workplaces employing migrant workers every half a year. Among the workplaces subject to inspections, 40% of them are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The inspections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working hours, break times and holidays. Additionally, the Government inspects if employers confiscate the passports of migrant workers and examines any possible instances of forced labor by intimidation or exploitation. Judicial action is assumed when such violations are recognized. Special inspections are conducted at workplaces with reporte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ndustrial accidents. In 2023, the Government plans to conduct inspections at 5,500 workplaces, focusing on working conditions and industrial safety.
54. Since October 2021, employers have been mandated to take labor rights training courses upon the issuance of an employment permit for migrant workers. The training courses, which covers the remedial proces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workplaces, are offered to migrant workers as well through pre and post-entry employment training. Also, audio-visual trainings abo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re produced in 16 languages and distributed to sending countries for pre-entry training, and it is planned to expand the training by using virtual experience. To facilitate remedy

²⁷ Refers to gender discrimination in recruitment, hiring, wages, training, placement, promotion, retirement age, retirement and dismissal.

²⁸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for clearly intentional or repeated discrimination.

²⁹ Number of workplaces subject to labor inspection expanded to 400 in 2020, 858 in 2021 and 996 in 2022.

³⁰ 2 times in 1 year and 10 months of re-employment period.

³¹ A council established at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s to discuss item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2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procedures, the Counseling Center for Foreign Workers is being operated, providing interpret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55. Since December 2022, the Government has imposed restrictions on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in workplaces that have faced punitive measur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ue to the death of a migrant worker. As of February 2023, farming and fishing sites having less than five employees, normally exempted from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ill only be granted an employment permit if they hav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r fishermen's accident insurance or submit confirmation on having agricultural and fishermen's safety insurance. In an effort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s, the submission of visual data on housing facilities is mandatory when applying for an employment permit. If an employer offers illegal temporary structures as accommodation, the employment permit is denied, allowing migrant workers to change their workplace.
56. The Government ratified the ILO Convention No. 29,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in 2021. In relation to Convention No. 105, the MOEL has been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ratification, conducting research in 2021 and 2022, respectively, and establishing regular consultations between relevant ministries. However, the pen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predominantly relies on imprisonment with labor.³² Therefore, a careful review of the penal system would be required at the fundamental level, including the clauses on the punishment of imprisonment with labor imposed for expressing political views and participating in strikes. In particular, the National Security Act which is one of the legislations needs to be reviewed, is difficult to revise.

Article 8 Labor Rights

Strikes

57. **Regarding Recommendation 39**, the Government has made amendments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o ratify ILO Fundamental Conventions since July 2018, and the Conventions No. 87 and 98 were ratified in April 2021.
58. Damages, seizure and criminal penalties for strikes by trade unions apply to illegal acts, such as violence, vandalism and full occupation of the workplace. Courts have significantly limited the application of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recognizing them only in cases where the strike is aggressive and causes substantial damage, thereby ensuring the maximum protection of the rights to strike by trade unions.³³
59. The essential business system was introduced which permits strikes at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es³⁴ after the ex officio arbitration system, which pre-emptively restricted strikes at essential public services was abolished.³⁵ The essential business system allows strikes in principle while imposing restrictions with regards to essential business to safeguard public interest. In Korea, 'essential business' is def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2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s the business whose suspension may seriously endanger the life, health, physical safety or the daily lives of the public. Korea does not pre-emptively restrict strikes in hospitals, electricity, water supply and telephone services sectors that the ILO regards as essential services. Essential businesses defined by the domestic law are similar in character to the ILO's essential

³² Imprisonment without labor is usually imposed on negligent offenders.

³³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is also of the opinion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trike must be considered in conjunction with the property rights of employers and the labor rights of non-striking workers, and thus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scope of th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strike under Korean law deviates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³⁴ Railroads, urban railroads and airlines, water utilities, electricity utilities, gas utilities, petroleum refineries and petroleum supplies, hospitals and blood supplies, the Bank of Korea, and telecommunications are considered essential public businesses.

³⁵ Abolished in 2008.

services³⁶ and minimum services,³⁷ and the scope cannot be deemed broader than the ILO standards. The system widely reflects trade unions' opinions by, for example, determining the level of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essential services at each workplace in accordance with labor-management agreements or decisions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60.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pecifies civil and criminal immunity for legitimate strikes and ensures the right of trade unions to strike under the provisions that prohibit replacement, outsourcing, subcontract, and dispatch, preemptive shutdown of the workplace, as well as arrest other than those caught in the act.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ies, including participation in legitimate strikes, constitute unfair labor practices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Unfair labor practices of employers are subject to remedial procedures befor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vailable through an application, and the victims may file charges and complaints to supervisory agencies to criminally punish perpetrators. (Annex, Table 20-21)

Trade Unions

61. **Regarding Recommendation 41**, by amending laws to ratify ILO Fundamental Conventions, the Government allowed dismissed workers to join trade unions and trade unions to independently delineate the scope of the membership according to their own rules, regardless of their organizational structure.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subject of trade union is stipulated as 'worker', thereby allowing any worker to freely establish and join trade unions. In addition, the nature of worker is also recognized in labor providers who are not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cluding the unemployed and the dismissed. Legitimately established trade unions enjoy the rights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The unions can seek remedy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MOEL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r employers who violate the rights to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62. The Government allows the multiple trade unions at each business as per relevant laws. The system to unify bargaining channels was adopted to minimize issues³⁸ that can arise from multiple trade unions.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gainst the trade unions engaging in bargaining will infringe upon the fundamental aspects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render the system of unified bargaining channel ineffective. Thus the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System' is adopted to impose certain duties on both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the employer. Protective measures, such as relief procedures befor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filing of charges and complaints to a supervisory agency to demand criminal punishment are prepared to prevent unfair labor practices by employers abusing the system.

Article 9 Social Security

³⁶ The ILO defines essential services as those whose interruption could jeopardize the life, personal safety or health of all or part of the population. These include the hospital sector, electric power, water supply, telephone, police and military, firefighting, public and private prison services and air traffic control.

³⁷ The ILO defines minimum services as (1) services whose interruption could jeopardize the life, personal safety or health of all or part of the population; (2) services that are not essential but whose scope and duration could result in a major national crisis that can jeopardize the normal living conditions of the population; and (3) public services of fundamental importance. These include ship transportation, businesses operated by national port enterprises and ports themselves, subways, rail transportation, passenger and goods transportation, postal services, minting and banking, petroleum, education, animal health and meteorology.

³⁸ They include hindering the creation of uniform working conditions, the lack of real bargaining power of minority unions, and excessive bargaining costs.

Social Security Rights and Social Services

63. **Regarding Recommendation 43**, since the implementation of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BLSS), the ‘obligatory support provider’ criteria have been identified as a primary cause of blind spots of welfare system. To address this,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to phase out the criteria since 2017. The criteria for those obligated to support their families was abolished for housing and livelihood benefits,³⁹ and families including the elderly, those with severe disabilities, basic pension beneficiaries or single parents of 30 or older were excluded⁴⁰ from the criteria. Such measures led to a rise in the number of recipients of the BLSS from 1.58 million as of the end of 2017 to 2.45 million as of the end of 2022. The Government continuously increased the standard median income to enhance security by expanding the number of beneficiaries and the amount of benefits. (Annex, Tables 22-23)
64. In line with Article 3 of th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Vouchers and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 Government provides social services and has a dedicated organization to support this. The quality of services delivered by social service providers is monitored through quality assessment. To enhance and guarantee the required service quality,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pilot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As for the quality assessment of social services, the Government is preparing to extend the scope of assessment to include services for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support from 2024. (Annex, Table 24)

National Health Insurance

65. **Regarding Recommendation 45**,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d announced a plan to support essential medical services in January 2023. The support plan includes measures that address medical services in the fields of severe illnesses, emergency, pediatrics and delivery that are at risk of decreased supply or infrastructural collapse and aims to provide essential medical services to all segments of the population, including marginalized groups, at all times.
66. In accordance with the Firs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mprehensive Plan (2019-2023), the Government strengthened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by gradually covering more items, easing benefit standards, and decreasing out-of-pocket ratio. The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increased by 1.8% from 62.7% in 2017 to 64.5% in 2021. In particular, the coverage rate for illnesses that ranked within the top 50 medical expenses per person improved by 2.4% from 77.8% in 2017 to 80.3% in 2021,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in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focused on illnesses that require high medical expenses. (Annex, Table 25)
67. In addition, to prevent the excessive burden of medical expenses, an upper limit on out-of-pocket expenses is in place, and the Government supports catastrophic health spending. As for the upper limit for out-of-pocket expenses, in case of annual out-of-pocket expenses over the upper limit set according to income decil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as been reimbursing the exceeded amount to the insured since 2004. In 2022, among the beneficiaries of the upper limit system, those in the bottom 50% of income were 1.588 million, 85% of the total beneficiaries, and the benefits they received amounted to 1.7318 trillion KRW, 70.1% of the total benefits, confirming the reduction in the medical expenses of the low income group.
68. As for the support for catastrophic health spending, supplementary medical expense support system which started in 2018 supports 50-80% of out-of-pocket expenses when those of the eligible households exceeds 10% of their annual income. Households are eligible when their income does not

³⁹ Some exceptions were made to consider the validity of allowing parents or children of high-income or high-net-worth individuals to be the beneficiaries, as well as the efficient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⁴⁰ In 2017, households with the elderly 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were excluded; in 2018, the standard with regards to housing benefits was abolished; in 2019, basic pensioners and households with single parents under 30 were excluded; and in 2021, elderly persons and households with single parents over 30 were excluded, and the criteria on livelihood benefits was abolished.

exceed the standard median income and their property does not exceed 700 million KRW. In May 2023, the Government strengthened the medical safety net for vulnerable groups by expanding the coverage of catastrophic health spending in outpatient treatment from severe to all illnesses and increasing the annual support limit from 30 million to 50 million KRW.

Article 10 Family Life

Elderly

69. **Regarding Recommendation 47(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22,498,000 registered members as of 2022, with an average monthly pension of approximately 533,000 KRW. The income replacement rate stands at about 43% of the average income based on 40 years of membership. The basic pension system, introduced in July 2014 to complement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nd enhance old-age income security, initially provided 99,000 KRW per month. However, as of December 2021, it pays up to 300,000 KRW per month to approximately 5.97 million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This has contributed to a decreasing trend in the old-age poverty rate from 43.6% in 2016 to 38.9% in 2020. The Government plans to establish the 5th Comprehensive Operation Plan for National Pension in 2023 by discussing ways to enhanc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conjunction with basic pension to strengthen old-age income security and enhance intergenerational equity. (Annex, Table 26-27)
70. **Regarding Recommendation 47(b)**, the Government, in November 2018, introduced the Basic Plan for Integrated Community Care. It is carrying out policies to provide housing, healthcare, nursing and care in an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manner, to enable the elderly to live healthily in their homes rather than in nursing hospitals and facilities. From June 2019 to December 2022, 13 local governments conducted pilot projects on integrated community care for the elderly, offering prevention, healthcare, daily support and in-home services tailored to individual needs to facilitate a longer and healthier life at home. Consequently,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t home improved, and the number of days spent at home after discharge increased compared to other regions.⁴¹ Starting from the second half of 2023, in-home health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will be expanded and a pilot project to establish a system that connects in-home healthcare, nursing, and care services will be carried out.
71. **Regarding Recommendations 47(c) and (d)**, the cases of elder abuse increased during the COVID-19 period due to family conflicts might have stemmed from prolonged stays at home and caregiving burden in institutions. To prevent and address elder abuse, the Government operates a 24-hour hotline for reporting at 38 specialized elderly protection organizations and 20 shelters for abused elderly across 16 provinces nationwide. An application for reporting elder abuse has been developed and distributed, facilitating immediate reports of abusive actions via mobile phones without exposing information about the complainant. Elder protection agencies in the region of the incident receive abuse reports, and after counseling and on-site inspections, the agency officer determines whether there was abuse. To prevent elder abuse and safety accidents, installation of surveillance camera in nursing homes is now required by the law.⁴² The human rights guardian system involves local residents monitoring facilities and providing human rights counseling. Medical and senior welfare facility staff are designated as those obligated to report elder abuse and receive relevant education as well as training in human rights of the elderly every year. (Annex, Tables 28-30)

Children

⁴¹ Days at home of the discharged patients in the areas subject to the pilot projects increased from 303 days in 2019 to 336 days in 2022, while those in the control areas decreased slightly from 325 days to 322 days.

⁴² It entered into force in June 2023.

72. To prevent unregistered birth, the Government introduced a birth notification system which mandates all medical institutions to submit birth information of a child to the state or public institutions, electronically or otherwise. The amendment bill on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to introduce this system was submitted to the NA on 4 March 2022 after series of consultations among relevant ministries, including the MOJ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HW). The bill was passed by the NA on 30 June 2023, promulgated on 18 July 2023 and will enter into force on 19 July 2024.
73. **Regarding Recommendation 49**, the current Criminal Act stipulates lesser punishment for infanticide and abandonment than general homicide and abandonment when committed by parents ‘in order to avoid disgrace or for fear not being able to bring the baby up or for some other extenuating motives’. This provision was criticized for failing to reflect the current circumstances as it has not been amended since its enactment in 1953. A recent missing case of infant even without registration (of birth) highlighted severe blind spots on the protection of infants’ right to life. Public perception of the severity of the crime of infanticide has also changed. Thus the Government abolished the crimes of infanticide and infant abandonment to have the crimes of general homicide and abandonment shall be applied.
74. In January 2021, the Government deleted the provision on the right to disciplinary actions in Article 915 of the Civil Act, which had been pointed out as a fundamental cause justifying child abuse under the guise of discipline.
75. **Regarding Recommendation 49(a)**, the Government mandated individuals who protect, manage or educate children by profession to report any discovered or suspected child abuse, imposing fines for non-compliance. Amendments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CAA) have continuously expanded the scope of occupations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resulting in a consistent trend of increase in the rate of child abuse reports by these individuals. (Annex, Table 31)
76. **Regarding Recommendation 49(b)**, with the aim to stop child abuse upon its occurrence while protecting the victim by separating them from the abuser,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measures under the CAA, such as emergency measures (Article 12), urgent temporary measures (Article 13), temporary measures (Article 19), protective dispositions (Article 36), and protection orders for child victims (Article 47). These are available from the reporting stage to the conclusion of the case. Since October 2020, public officials became responsible for conducting child abuse investigations, which previously had been done by private organizations, thus strengthening public accountability. A total of 852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child abuse have been deployed for investigations in 229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gun, gu*) nationwide, and 85 child protection agencies and 125 shelters for abused children were established. (Annex, Tables 32-35)
77. **Regarding Recommendation 49(c)**,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family protection project for children in vulnerable group in March 2021, entrusting children under temporary protection of the immediate separation system to suitable families in order to protect them in a family-like environment. The Child Welfare Act was amended in June 2021 to establish the basis for specialized foster care that protects children in need of special protection, such as victims of child abuse, at home. Since 2022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expenses have been provided to these families.
78. To recruit foster families, the Government promoted the project through various online and offline media channels, including press releases, public service TV announcements, radio, YouTube, web posters and leaflets. (Annex, Table 36)
79. 52 children were protected through the family protection project for children in crisis in 2021, 43 in

2022, and a total of 271 children⁴³ were referred to specialized foster care.

Article 11 Adequate Standard of Living

Right to Portable Water

80. **Regarding Recommendation 51**, to address extreme droughts brought by climate crisis, the Government has enhanced interconnection between water facilities, such as dams, rivers and reservoirs and secured water resources in various ways, for example, by utilizing dam water for households and industrial purposes. Moreover, the Government is carrying out projects to improve outdated water supply systems to enable the provision of safe tap water for users. Technical support is also provided to water purification plants facing operational challenges due to the lack of expertise among operating personnel and aging facilities. (Annex, Tables 37-39)
81. In regions without water supply systems, groundwater is used for household water; however, many groundwater facilities are vulnerable to external contamination due to their aging. Thus, after conducting free testing of water quality for private groundwater facilities upon surveying the demand by local governments, the Government provided support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to the groundwater facilities that fell short of the water quality standards. As a result of cleaning and disinfecting 2,297 facilities in 2022, the efficiency rate of improvement in water quality amounted to 88.8%. (Annex, Tables 40-41)
82.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is working on the installation project of unmanned and decentralized water supply systems that would stably provide tap water to vulnerable areas such as remote and mountainous regions. The MOE plans to secure the world's first desalination plant ship for the provision of water to archipelagoes, which is expected to produce and supply usable water to coastal areas and islands facing water scarcity. In addition, the MOE is committed to provide stable water supply to residents by installing more groundwater storage dams⁴⁴ in islands and inland where water supply is scarce.⁴⁵ Furthermore, the Government plans to accelerate its efforts to secure alternative water resources by supplying water for industrial purposes using treated wastewater which can be massively supplied and by using 120 million tons of annually discarded runoff for various purposes, including air-conditioning, heating, small-scale hydropower generation and road cleaning.⁴⁶

Right to Housing

83. **Regarding Recommendation 53(a)**, the Government conducted a nationwide homelessness survey in 2021 and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e mid- to long-term Second Comprehensive Plan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Support for Homeless Persons (2021-2025). The plan incorporates measures, such as housing and medical care support, field support on the street, the provision of welfare services to help the homeless prepare for resettlement in the community, and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infrastructure.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medical benefits for the homeless have been improved to remove restrictions on access to medical care, and the Government made all primary and secondary healthcare facilities, except nursing hospitals, to provide medical care to the homeless by implementing a public announcement. In addition, welfare resources, such as emergency sleeping

⁴³ As of the end of 2022, there were 237 children in care.

⁴⁴ The groundwater storage dam installed in December 2022 in Bogil-do, Wando-gun, Jeollanam-do, provided 120,000 tons of water for about five months, contributing to the relief of drought damage for residents.

⁴⁵ According to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Groundwater Act, such areas refer to areas that do not have water supply and use groundwater for drinking water, areas that are vulnerable to drought and need to secure water resources for emergencies and areas with serious water pollution that do not have an alternative water source nearby.

⁴⁶ Cleaning with water trucks or equipment.

bags and heating and cooling supplies for winter and summer, are secured and provided in advance. In particular, as the ratio of female homeless persons to male is increasing, a case management manual customized for the female homeless has been produced and distributed, enabling its application in the field.

84. **Regarding Recommendation 53(b)**,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social housing through diversification of rental housing providers as an alternative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the housing supply system that is divided into public and private. Public rental is difficult to continuously expand due to the lack of developable land and financial burden, while private rental has limitations in resolving housing problems of vulnerable groups due to high rents attributable to its for-profit natu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 theme-based buy-to-lease project is being implemented in which the private sector plans, creates, supplies and operates some public buy-to-lease housing and public housing businesses (owners) support and supervise the entire process. (Annex, Table 42)
85. **Regarding Recommendation 53(c)**, the Government runs a Registered Rental Housing System to support housing stability for tenants. This system institutionally helps tenants at registered rental housing to reside with stability for a long term by banning the refusal to renew the contract during the lease obligation period,⁴⁷ placing a restriction on rental increase,⁴⁸ and requiring enrollment in rental deposit guarantee insurance. It also supports stable supply of registered rental housing by granting tax benefits for national and local taxes to rental businesses who comply with public obligations.
86. In June 2020, the Government amende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fter gathering various opinions, including from academia and civil society, and introduced the right of tenants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and a rent control system. Accordingly, the landlord cannot refuse a renewal without a valid reason when the tenant requests it between six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lease period and one month prior thereto. Tenants can exercise this right once, and the renewed lease is considered to have a duration of two years. Additionally, although rental increase is capped at 5%, local governments are authorized to set the cap differently by ordinance, considering local rental market conditions.
87. To prepare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based on an impact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of the tenant's right to request a lease renewal and a rent control system, as well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Task Force on Improving Housing Lease System in July 2022 and is conducting research with specialized agencies.
88. **Regarding Recommendation 53(d)**, the Government provides legal protections against eviction measures, such as negotiation rights, access to alternative housing and temporary housing plans,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other relevant laws. It will continue to manage and oversee to ensure the compliance of the regulations.

Article 12 Right to Health

Suicide Prevention

89. **Regarding Recommendation 56**,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Fifth Basic Plan for Suicide Prevention (2023-2027) with the vision of 'realizing a society safe from suicide'. The plan includes five key strategies,⁴⁹ 15 core tasks and 92 subtasks aimed at reducing the suicide rate by 30% by 2027. In particular, a cooperation mechanism was established among the MOGEF, MOEL,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implement suicide prevention policies that take

⁴⁷ The term is 10 years for both long-term general rental houses and publicly supported rental houses.

⁴⁸ It is capped at 5 percent.

⁴⁹ They are building a safety net, reducing risk factors for suicide, enhancing post hoc management, tailored suicide prevention and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population by life cycle (children and adolescents, young adults, the elderly, etc.) and places of activity (schools, workplaces, military units, etc.).

90. The Government conducts an examination in stud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every three years after they enter an elementary school⁵⁰ to support their healthy growth by identifying stud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in emotion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It also supports counseling, management, and referrals to specialized agencies for those in mental health crisis. To support students in crisis, the Government expanded the support project whereby mental health experts visit schools to counsel students and parents and make referrals to specialized institutions. Simultaneously, the Government supports medical and treatment expenses for students. The Government plans to maintain the existing support system centered on students in mental health crisis and gradually expand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all students, including reviewing the idea of popularizing mental health management apps using digital technology and strengthening students' mental health literacy skills by developing and distributing training programs in mental protection.
91.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d operated a mental health support system for employees, the unemployed and job seekers. It supports workers in small business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with psychological counseling, such as job stress management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management, through health centers for workers and trauma centers. The Government operates the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which provides online and offline counseling support and group programs in areas such as suicide and job stress for employees and business owner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It also provides programs in psychological stability offered by professional counselors for the unemployed and job seekers who need mental health counseling. (Annex, Tables 43-45)

Mental Health

92. **Regarding Recommendation 58**, the Second Basic Plan for Mental Health Welfare (2021-2025) that strengthened national accountability and public dimension was established in order to expand the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mental health services. The plan includes measures such as strengthened early recognition and intervention of mental illnesses, the improvement of the mental emergency service system and support for ongoing treatment expenses. It also includes ways to expand local mental health services, such as expanding projects for the integrated promotion of mental health in communities and strengthening the functions and workforces of local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The Government increased the budget for mental health, which covers psychiatric hospitals,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and suicide prevention projects, allocating 443.2 billion KRW in 2023.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93. **Regarding Recommendation 60**,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April 2019 that the 'crimes of abortion' under the Criminal Act does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by 'comprehensively and uniformly compelling the maintenance of pregnancy and infring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by punishing violators'. The bills to amend the Criminal Act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ere submitted to the NA in November 2020, based on various opinions of different stakeholders and experts gathered throughout discussions, meetings and consultations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institutions.⁵¹

⁵⁰ The test is conducted in the first and fourth year of elementary school,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and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⁵¹ Currently, there are a total of six bills to amend the *Criminal Act*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the bill to delete Chapter 27 (Crimes of Abortion) (proposed by Representatives Kwon In-sook, Park Joo-min and Lee Eun-joo, respectively), the bill to allow abortion

94. A meeting with stakeholders was held in February 2021 followed by a public forum in May of the same year. Based on the gathered opinions, relevant ministries consulted and disseminated a pregnancy and childbirth manual to relevant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carry out relevant policies by including ‘strengthening gender-conscious health policies’ in the Third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Policies (2023-2027).
95. The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comprehensive counseling services and information on pregnancy and childbirth to secure and strengthen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in order to improve women’s reproductive health. It offered customized sex and health education depending on the audience groups, such as adolescents, university students and adults. The website called Love Plan (loveplan.kr) provides medical information⁵² from experts⁵³ about ‘crisis pregnancies’ and ‘pregnancy conflicts’, including the maintenance and termination of pregnancy, as well as accurate knowledge and information related to sex and reproduction. In particular, by running online and offline counseling rooms, supports have been provided to those in need of help due to situations such as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nd unexpected pregnancies, including medical and social welfare services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The Government is currently working to support reproductive health management examination fee for individuals planning pregnancy so that high-risk factors for pregnancy and delivery are detected early on. (Annex, Table 46)

Medical Treatment for Persons Living with HIV/AIDS

96. **Regarding Recommendation 62**, the Medical Service Act prohibits medical practitioners or medical center owners from refusing medical treatment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In case of violation,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an order a correction within a given period. The Medical Service Act stipulates imprisonment of up to one year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KRW against the violator.
97. To ensure access to treatment services for persons with HIV/AIDS regardless of their age, sex, and nationality, the Government has been fully funding HIV medication costs and medical treatment for related illnesses since 2003. 90 percent of medical expenses ar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benefits and the remaining 10 percent are fund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a separate budget. The nationwide Counseling Project for HIV-Infected Persons provides integrated services, including medication management, life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referrals to community welfare resources. The project covered 11,396 infected persons as of the end of 2022, which is 70% of all surviving infected persons.
98. Pursuant to the Enforcement Rules on the Medical Service Act, the Government ensures that HIV-infected persons can use nursing hospitals without discrimination and supports infec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expenses of nursing hospitals where infected persons are hospitalized. Various training programs for medical and prospective medical staffs are also provided to address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those with HIV/AIDS. These curricula are annually funded by the Government and regularly offered by specialized institutions. In December 2020, the Guidelines for Healthcare Organizations Treating People with HIV/AIDS was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all medical service institutions. The Guidelines state the principle of anti-discrimination by all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makes it clear that they should abide to the Guidelines when consulting or treating HIV-infected persons. In 2023, job training courses for doctors and a supplementary training course for nurses treating tuberculosis included a subject related to medical discrimination against

without any restrictions for cases within six weeks and to allow abortion for socio-economic reasons for cases within 10 weeks (proposed by Representative Cho Hae-jin) and the bill to allow abortion for socio-economic reasons for cases within 10 weeks (proposed by Representative Seo Jung-sook).

⁵² Surgical procedures, complications, etc.

⁵³ Gynecologists, urologists.

HIV-infected persons.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work towards safeguarding the right to health of HIV-infected individuals by developing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supportive policies on comorbidities or complications arising from aging of HIV-infected persons.

COVID-19 measures

99. Based on the experience and data gained during the COVID-19,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protect the right to health through a tailored medical response system following the spread of the omicron variant virus that was highly contagious but low in fatality rate. For those with common symptoms, a diagnosis and testing system was operated, focused on local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neighborhood hospitals and clinics. The number of ‘one-stop medical centers’, capable of conducting tests, providing treatment and prescribing medications at one go, was expanded to over 10,000, enhancing the accessibility to treatment. A fast track system was separately managed for high-risk groups, including those aged 65 and over, focusing on diagnosis and testing at public health centers, prescribed medicines on the day of treatment, and enabled swift hospitalization when needed through making referrals, thereby protecting the right to health of high-risk groups. Moreover, individuals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received personalized management and treatment based on the severity of their conditions. Asymptomatic and mild COVID-19 patients were treated at home in principle, but if self-isolation is not possible, they could be admitted to a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For COVID-19 patients with severe symptoms, treatment beds were provided at government-designated wards. Special beds were also secured to protect patients requiring dialysis, delivery and pediatric care who face difficulties in treatment within the conventional medical system. The MHW increased the supply and quality of services and alleviated financial burden on users by supporting budget for such series of medical response systems and applying health insurance to medical expenses.

Article 13, 14 Right to Education

Quality Education

100. **Regarding Recommendation 64(a)**, the Government is pursuing various policies to strengthen public education. To strengthen public English education, it runs an English curriculum focused on communication starting from the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supports AI-based English speaking system. Additionally, to reduce the reliance on private math education, it provides various online math contents that help with understanding principles and concepts of mathematics. The Government also promotes math learning focused on exploring engineering and supports digital-based learning.
101. In addition, supports for student art clubs in various fields that reflect school conditions and students’ interests and talents have been continuously expanded since 2010. To address cultural disparities in underserved regions, the Government has supported art education opportunities that reflect various demands and conditions since 2018.
102. To allow students to choose and take various subjects based on career interest and aptitud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has been gradually introduced since 2017. In 2021,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amended. As of 2023, the system is in pilot operation in all general high schools, and a joint education curriculum among schools and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local communities are being offered to fulfill various educational needs of students. The system will be fully implemented in 2025 to support various subjects and students’ completion of courses.
103. **Regarding Recommendations 64(b) and (c)**, the Government annually examines the composition and execution of school curricula and whether there are exam questions on materials beyond the given curriculum in order to reduce the reliance on private education based on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nd Regulation on Pre-curriculum Education. It also conducts impact assessments of university-specific exams (essay exams, interviews, etc.) to gauge their effects on causing advanced study.

104. Moreover, to reduce the participation rate in private education regarding career and admission counseling, the Government is pursuing policies to strengthen career education at schools. It supports tailored career education starting from elementary school through ‘Junior Career Net’ service, which has been providing career counseling and information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since 2020. It also provided contents to support career education at schools by updating the K-Type Occupational Interest Test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newly developing a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test for elementary students. In response to continuous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rivate Education Reduction Plan in June 2023 to alleviate the economic burden on parents and restore trust in public education.

Equal Access to Education

105. **Regarding Recommendation 64(d)**, Korea guarantees the basic right to education under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The high school enrollment rate reaches 99 percent at present.⁵⁴ To reduce educational inequality based on income, the Government expanded free education for all grades in high school since 2021. It supported 1.6 million KRW per person, covering admission fees, tuition, administrative fees and textbook costs, and thus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in financial burden on students and parents. (Annex, Table 47)
106. To ensure equal right to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Government has promoted mandatory education for students in need of special education in kindergarten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us established special education schools and expanded special education classes in regular schools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special education. To provide support tailored to the type of disabilities, ‘intermediate and multiple disabilities’ was added to the categories of those in need of special education by amending Article 27 of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ecember 2021. The Sixth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5 Year Plan (2023-2027) was established as well. (Annex, Tables 48-49)
107. In April 2021,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conditional relief measure for foreign children to complete their education regardless of their status of residence, if they were born and stayed in Korea for at least 15 years and currently enrolled in school. Furthermore, in February 2022, the Government expanded the eligibility to include children who entered the country as infants and reduced the required period of stay in Korea to 6-7 years to guarantee the right to education for foreign children.
108. The Government guides migrant children’s admission and enrollment procedures through the Manual on School Enrollment for Foreign Students. In consultation with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 Government plans to clarify in the manual to ensure that documents other than those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5 Right to Culture and Benefit from Scientific Progress

Cultural Diversity

109. **Regarding Recommendation 66**, the Government conducts a fact-finding survey on cultural diversity every two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⁵⁴ Educational Statistics and Analysi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ugust 2022)

Diversity and the Enforcement Decree, and submits annual policy reports on cultural diversity to the NA. The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jointly composed of those from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has been active since 2021. The Committee conducts regular monitoring of policies on cultural diversity by deliberating key issues related to fact-finding surveys, annual reports and national report submitted to UNESCO.

110. The Government has set increasing and disseminating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diversity as a major policy task and has been pursuing policies, such as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by life cycle, public campaigns during the week of cultural diversity commemorating the International Cultural Diversity Day designated by the UN, and support for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among various actors of cultures, including migrants.⁵⁵ In response to the diversification of cultural backgrounds due to the consistent increase in foreign residents,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targeted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and campaigns, as well as exchange and communication programs based on population groups and regions, thereby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mutual understanding among community members. In particular, as diversity committees at universities expanded and the interest of businesses increased, the Government plans to invigorate the policy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and broaden social discourse by expanding the public-private policy governance. (Annex, Tables 50-51)
111. The Government commemorates 20 May as ‘Together Day’ to promote ‘a social environment where Koreans and foreigners can live together while respecting each other’s cultures and traditions’. On 19 May 2023, the Government once again hosted a commemorative event for the 16th Together Day, and local governments hosted their own events.
112. Local immigration offices,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foreigners, have held various cultural events during ‘Together Week’ where Koreans and foreigners can participate together.
113. For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matters related to foreigners in relevant institution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the Police Agency, the Institute of Justice has been offering a course on ‘Understanding Immigration Policies’ twice a year since 2012. In addition, workshops for official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le for policies on foreigners are offered every year. In 2022, at each local administrative area, four workshops were held, where 247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responsible for policies on foreigners participated.
114. In 2021, the MOJ developed the ‘Korea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icator and Index Development’ to measure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assess the efficiency of the Government’s integration policy and system. A pilot project of policy evaluation and consulting based on the migrants’ social integration index began in 2023, and based on its result the Government plans to produce a policy consulting guidebook that assists in establishing policies tailored to local characteristics, such as residential area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foreigners and areas with declining population.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115. **Regarding Recommendation 68**, as digitalization has expanded across all sectors of economy and society,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Digital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cludes expanding opportunities for all nationals to receive digital education. This strategy has been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performance of this strategy is under review.

⁵⁵ During four years from 2019 to 2022, the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of participants of cultural diversity programs increased by 14.1% on average compared to their pre-participation levels.

General Affairs

National Human Rights Body

116. **Regarding Recommendation 16**, filing complaints to the NHRC are currently limited to cases where human rights specified in Articles 10 through 22 of the Constitution have been violated or cases of discrimination. However, not all of complaints regarding social rights are dismissed since those alleged to violate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principle of equal rights, are subject to investigation and remedy. (Annex, Table 52)
117. A bill to ame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o allow complaints about violations of social rights was submitted to the 20th NA on 24 November 2017 but was disposed due to the expiration of NA session.
118. The NHRC established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 Division in 2018 to strengthen policy responses to the rights under ICESCR. The Division is working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including commissioning a research service to introduce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al remedy procedure for social rights violations in 2023.

Business and Human Rights

119. **Regarding Recommendation 18(a)**, the Government has reviewed potential legislation of human rights due diligence, by inserting a new chapter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the 3rd NAP and conducted a primary research study on the legislation of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in 2020. The bill on the Framework Act on Human Rights Policy which emphasizes the state's obligation and corporate responsibilities to respect human rights was submitted in 2021, and is still pending at NA.
120. The Government encourages corporates within the territory and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voluntarily implement human rights due diligence to fulfill corporate responsibilities to respect human rights, let alone to identify, prevent and address negative impact on human rights caused by corporate activities. The Government published the 'Guidelin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December 2021 and distributed about 2,400 copies to listed corporations and major trade associations. The Guidelines introduces the concept of and the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due diligence, encouraging corporations to gradually implement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 December 2022, the Government published the English version of the Guidelines in electronic form and uploaded them on the MOJ's website for Korean corporations abroad.
121. **Regarding Recommendation 18(b)**, it is note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resulting from business activities are considered illegal practice under the Civil Act. Affected persons have the option to dem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rough civil lawsuits with existing judicial remedies available.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provisions in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ffected persons may file suit in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i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recognized.⁵⁶
122. **Regarding Recommendation 18(c)**, the Government'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is promoting human rights management, exemplified by the Human Rights Management Declaration in 2019. Measure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committed by executives, employees or a third party include the 'Rules for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coupled with training, counseling centers, grievance handling procedures, manual creation. Gender mainstreaming is encouraged through 'Guidelines on adopting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⁵⁶ The revision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specifi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Article 2) and establishes 35 general and type-specific rules.

applicable to thorough procedures such as project identification, feasibility study, project deliberation, monitoring and post-evaluation, resulting in a notable increase in projects subject to gender markers. Mandatory gender-related performance management and post-evaluation analysis are implemented for each project. (Annex, Table 53)

123. **Regarding Recommendation 18(d)**, the Government is making its efforts to strengthen transparency, inclu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OECD National Contact Point (NCP), a non-judicial grievance mechanism. The NCP appointed experts in human rights, labor and arbitration proceedings, ensures and ensures transparency in the appointment process is regulated in the relevant rules. The NCP maintains an organic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NCP Committee and the Mediation Committee to systematically support the handling of complaints. Stakeholder opinions are sought through interviews with complainants and respondents. Practical and specific recommendations are provided to the respondent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the final statement issued after closing the case, and follow-up measures are take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NCP. The NCP website discloses the details of complaints cases, providing information materials on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NCP, as well as materials related to case processing. Publicity efforts include seminars, briefings, online advertisements and website operations to engage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major amendments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made in June 2023 will be incorporated through amendments to the relevant regulations.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124. **Regarding Recommendation 69**, in September 2023, the Government initiated a study to analyze the cumulative cases of the individual complaints filed by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he Government will further examine the possibility of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125. **Regarding Recommendation 70**, further consideration is required for the Government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s it includes some of the elements in conflict with domestic laws such as the Immigration Act. Specific measures, such as allowing families of short-term workers to stay in Korea, regularization of the irregular situation of foreign workers, should be approached carefully from an immigration policy aspects in consideration with any unpredicted outcome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is required, including the social costs of domestic settlement (housing, healthcare, education, etc.,) support for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the relationships with other residence statuses such as permanent and resident visas and public consensus. Yet, regardless of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be committed to improve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and humanitarian supports.
126. The Government completed the process by depositing the instrument of accession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is entered into force in Korea from 3 February 2023.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27. **Regarding Recommendation 71**,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K-SDGs reflecting domestic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doption of the UN SDGs.
128.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sustainable national basic strategy every five years with a planning period of 20 years,⁵⁷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Currently, the Fourth Basic Plan (2021-2040) is being implemented. Among the 17 goals of the K-SDGs in the Fourth Basic

⁵⁷ Based on the Article 7 of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special emphasis is placed on indicators related to ‘Goal 1. Reduce poverty and strengthen social safety nets’, ‘Goal 3. Ensure healthy and joyful lives’, ‘Goal 4. Quality education for all’, and ‘Goal 10. Eradicate inequality of all kinds’, to establish a national monitoring system ensuring social rights and to achieve SDGs based on the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In 2024, the Government plans to conduct a national sustainability assessment to measure the degree of achievement and progress. In 2025, the Fifth National Basic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6-2045) will be established.

Human Rights Indicators

129. **Regarding Recommendation 72**, the NHRC established the Mid to Long-term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Human Rights Statistics (2018-2020) to systematically monitor changes in the overall human rights situation, includ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rough a business agreement with Statistics Korea, a framework for national human rights statistics was developed. Since 2019, human rights statistics have been produced and released annually. National human rights statistics are produced by synthesizing existing state-approved statistics, human rights-related statistics from administrative data and the result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Survey,⁵⁸ conducted by the NHRC. These statistics are broadly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of rights: equal rights, human rights and social rights. 274 (58%) of the total 467 statistical indicators are related to social rights.

Distribution of Concluding Observations and Follow-up Measures

130. **Regarding Recommendation 73**, the Government has undertaken various initiatives to disseminate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fourth periodic report. These efforts include the publication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in the MOJ’s website and the annex to the third NAP, which was adopted in August 2018. The Government collaborated in publishing materials related to ICESCR in the NHRC website.
131. Furthermore, the Government involved the NHRC and members of civil society in the implementation and follow-up measures of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In a discussion held in November 2017, the Government sought the stance of the NHRC and members of civil society regarding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fourth periodic report and the opinions over its implementation. The review opinions provided by the NHRC were taken into account before submitting the follow-up report o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in April 2019.
132. Prior to the submission of this periodic report, the Government gathered the perspectives of civil society members and other stakeholders on the implementation of its obligations under ICESCR at the ‘Discus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4th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and Future Challenges’, organized by NHRC in March 2023.

Common Core Document

133. **Regarding Recommendation 75**, the Government periodically updates the common core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n the Form and Content of Reports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RI/GEN/2/Rev.6) and submitted the latest document incorporating recent information to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February 2022.

⁵⁸ Renamed as ‘Human Rights Awareness Survey’ since 2022.

< Annex >

Table-1. List of training courses on rights under the ICESCR for judges (Apr. 2018 to Apr. 2023)

Period	Title	Trainees
18 to 21 Mar. 2018	Labor cases	60
19 to 21 Mar. 2018	Juvenile protection trials	14
22 to 23 Mar. 2018	Family and child protection trials	18
26 to 29 Mar. 2018	Family trials	80
9 to 11 Apr. 2018	Medical cases	45
23 to 24 Apr. 2018	Major issues of special litigations (environmental litigations)	26
14 to 15 May 2018	Gender, law and courts	35
14 to 15 Mar. 2019	Labor cases	52
18 to 19 Mar. 2019	Juvenile protection trials	11
21 to 22 Mar. 2019	Family and child protection trials	26
25 to 28 Mar. 2019	Family trials	65
15 to 17 Apr. 2019	Medical cases	42
23 to 24 May 2019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judges	35
4 to 6 Dec. 2018	Major issues in gender laws	29
19 to 20 Mar. 2020	Juvenile protection trials	28
23 to 24 Mar. 2020	Family and child protection trials	53
25 to 27 Mar. 2020	Family trials	118
30 Mar. to 1 Apr. 2020	Litig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62
6 to 7 Apr. 2020	Medical cases	78
18 to 19 May 2020	Labor cases	86
18 to 19 May 2020	Gender, law and courts	42
23 to 24 Apr. 2018	Major issues of special litigations (environmental litigations)	26
11 to 12 Jun. 2020	Major issues of intellectual property	35
15 to 16 Mar. 2021	Labor cases	52
17 to 19 Mar. 2021	Family trials	11
22 to 23 Mar. 2021	Juvenile protection trials	26
24 to 25 Mar. 2021	Family and child protection trials	65
29 to 31 Mar. 2021	Litig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62
5 to 6 Apr. 2021	Medical cases	106
3 to 4 May 2021	Gender, law and courts	43
9 to 10 Aug. 2021	Major issues of labor trials	87
13 to 14 Dec. 2021	Study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	52
14 to 16 Mar. 2022	Labor cases	194

21 to 22 Mar. 2022	Juvenile protection trials	49
23 to 24 Mar. 2022	Family and child protection trials	82
28 to 30 Mar. 2022	Litig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107
4 to 6 Apr. 2022	Family trials	155
11 to 13 Apr. 2022	Medical cases	107
18 to 19 Apr. 2022	Major issues of environmental litigations	64
9 to 10 May 2022	Gender, law and courts	89
23 to 24 May 2022	Major iss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tigations	106
25 to 27 May 2022	Study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I	51
12 to 13 Oct. 2022	Foreigners' trials	38
12 to 13 Dec. 2022	Environmental litigations I	32
6 to 8 Mar. 2023	Labor cases	251
20 to 21 Mar. 2023	Juvenile protection trials	36
22 to 23 Mar. 2023	Family and child protection trials	67
27 to 29 Mar. 2023	Litig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143
3 to 5 Apr. 2023	Family trials	197
10 to 12 Apr. 2023	Medical cases	117

Table-2. List of human rights training courses for prosecutors (2017 to Mar. 2023)

Year	Course title	Training period	Subject	Trainees
2017	Leadership course for directors of prosecutors' offices	20 to 24 Nov.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9
	Integrated training for newly-appointed prosecutors	May to Sep.	As above	112
2018	Female and children investigation course	9 to 10 Apr.	Training on domestic violence and human rights awareness	25
	Leadership course for experienced prosecutors	8 to 18 May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41
	Leadership course for newly-appointed chief prosecutors	18 Jun. to 13 Jul.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affairs investigations	78
		23 to 25 Jul.	Gender equality in the operation of departments	
	Leadership course for assistant prosecutors general	3 to 7 Sep.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in prosecutors' office from the perspective of NHRC	16

	Leadership course for directors of prosecutors' offices	17 to 21 Sep.	Organizational culture of gender equality	13
	Human rights training for prosecutors	Mar. to Nov. (12 times)	Investigation practice and video feedback	170
	Integrated training for newly-appointed prosecutors	May to Sep.	Gender equality, case discussions on job ethics of prosecutors, human rights and minority protection, etc.	118
	Leadership course for newly-appointed chief prosecutors	11 to 22 Feb.	Human rights respect and violation cases	127
		5 to 6 Sep.	Gender equality (I , II)	
		19 to 20 Sep.	Department operation and gender equality	
	Women and children	20 to 22 Mar.	Sexual assault and human rights	19
	Capacity-building course for less experienced prosecutors	8 to 10 May	Gender equality and prevention of abuse based on authority	29
2019	Leadership course for experienced prosecutors	13 to 24 May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and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47
	Leadership course for directors of prosecutors' offices	30 Sep. to 2 Oct.	Gender equality and organizational culture	8
	Course to improve human rights sensitivity for prosecutors responsible for the disabled-related cases	1 to 3 May	Human rights protection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and the code of conduct for human rights protected investigation	43
		26 to 27 Sep.	Philosophy of human rights and paradigm shift, etc.	
	Course for prosecutors responsible for foreigners, non-national residents, North Korean defectors cases	13 to 14 Jun.	Hatr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migrants, criminal procedures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24
	Human rights training for prosecutors	Mar. to Nov. (12 times)	Practice of investigation and video feedback	139
	Integrated training for newly-appointed prosecutors	11 May to 30 Sep.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minority, gender equality, etc.	132
	Leadership course for chief prosecutors	6 to 17 Jan.	Investigation of violent cases and human rights from the perspectives of re-tried cases	34
		2 to 5 Nov.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rules of public affair notifications	31
	Capacity-building course for	8 to 12 Jun.	Violent cases and human rights	29

	less experienced prosecutors (required)			
	Leadership course for experienced prosecutors	15 to 19 Jun.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s	26
		6 to 10 Jul.	Gender equality	40
2020	Course to improve human rights sensitivity (for prosecutors responsible for the disabled-related cases)	18 to 19 Jun.	Practice and case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investigation, etc.	43
	Course to improve human rights sensitivity (for prosecutors responsible for foreigners, non-national residents, North Korean defectors cases)	2 to 3 Jul.	Cultural-diversity and human rights, etc.	37
	Course to improve human rights sensitivity for human rights status supervisors	4 to 6 Nov.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sensitivity, understanding of hatred and discrimination and the equality act, human rights state in the Korean society and items to improve, investigation and human rights, etc.	23
	Leadership course for assistant prosecutors general	9 to 11 Nov.	Introduction of the NHRC and human rights in our society, gender equality	14
	Integrated training for newly-appointed prosecutors	May 2021 to Jan. 2022	Investigation role-playing, case discussions on job ethics of prosecutors	101
	Capacity-building course for less experienced prosecutors (required)	8 to 12 Mar.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violent cases and human rights, etc.	37
		18 to 22 Oct.		37
	Leadership course for experienced prosecutors	19 to 23 Apr.	As above	32
		30 Aug. to 10 Sep.		17
	Leadership course for newly-appointed chief prosecutors	12 to 23 Ap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gender equality	33
		6 to 10 Sep.		26
2021	Leadership course for assistant prosecutors general	13 to 15 Sep.	Introduction of the NHRC and human rights in our society, etc.	16
	Leadership course for directors of prosecutors' offices	8 to 12 Nov.	Gender sensitivity and organizational culture (gender equality)	10
	Human rights training for prosecutors	16 Apr. to 25 Jun. (3 times)	Practice and feedback for human rights-friendly investigations	36
	Course to improve human	10 to 12 Mar.	Protection of children's human rights	23

	rights sensitivity (for prosecutors responsible)		that can be sought by investigators, criminal procedures and human rights, etc.	
	Course to improve human rights sensitivity (for prosecutors responsible for the disabled-related cases)	13 to 14 May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riminal procedures, etc.	41
	Course to improve human rights sensitivity (for prosecutors responsible for foreigners, non-national residents, North Korean defectors cases)	1 to 2 Jul.	Actual cases of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during investigations and trials,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rights	29
	Integrated training for newly-appointed prosecutors	2022	Discussion on professional ethics of prosecutors,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vestigation process, etc.	89
	Leadership course for experienced prosecutors	8 to 13 May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in investigation process, etc.	25
		19 to 23 Sep.	As above	15
	Leadership course for chief prosecutors	13 to 17 Jun.	Gender equality, human rights protection	32
		17 to 21 Oct.		11
	Leadership course for assistant prosecutors general	30 Aug. to 2 Sep.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10
	Leadership course for directors of prosecutors' offices	15 to 16 Dec.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seen through arts	10
2022	Capacity-building course for less experienced prosecutors (required)	20 to 24 Jun.	Gender equality	29
		19 to 23 Sep.		27
	Course to improve human rights sensitivity (for prosecutors responsible for the disabled-related cases)	1 to 2 Dec.	Human rights sensitivity through play, viewing disability based on human rights, understanding of advocac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27
	Course to improve human rights sensitivity (for prosecutors responsible for foreigners, non-national residents, North Korean defectors cases)	1 to 2 Sep.	Human rights seen by North Korean defectors, investigations and human rights based on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ttitude for human rights investigations, first step toward human rights	28
	Human rights training for prosecutors	Apr. to Nov. (5 times)	Practice and feedback for human rights-friendly investigations	51
2023	Human rights training for prosecutors	13 Mar.	As above	10

Table-3. Major rulings citing the rights under the ICESCR

No.	Court Name	Case No.	Date of Decision	Case Name
1	Seoul High Court	2022Nu32797	21-02-2023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insurance premiums
2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20GaHap538860	09-12-2022	Wage
3	Seoul High Court	2021Na2021485	23-09-2022	Wage
4	Seoul Administration Court	2021GuDan51099	19-01-2022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partial payment of disability benefits, etc.
5	Seoul Administration Court	2021GuHab55456	07-01-2022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insurance premiums
6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20GaDan5322063	19-08-2021	Compensation for damages (other)
7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18GaDan5125207	29-10-2019	Compensation for damages (country)
8	Supreme Court	2016Do10912	01-11-2018	Viol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9	Jeju District Court	2017GoDan16	08-11-2017	Viol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10	Incheon District Court	2015GoDan5609	06-02-2017	Viol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11	Incheon District Court	2016GoDan2624	06-02-2017	Viol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12	Incheon District Court	2016GoDan5794	06-02-2017	Viol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able-4. Access to Remedies

1) Current state of cases for relief through litigations

	(1) Received	(2) Accepted (Applied)	(3) Accepted (Ex officio)	(4) Sum of accepted case (= (2) + (3))
2017	11,999	5,848	2,242	8,090
2018	11,540	6,156	3,727	9,883
2019	12,341	7,265	3,817	11,082
2020	13,322	8,322	5,397	13,719
2021	13,881	9,047	8,618	17,665

2) Cases for relief through litigations

	Amount allocated	Amount executed
2017	4,560	4,403
2018	6,022	4,197
2019	6,249	4,279
2020	5,337	4,903
2021	5,933	5,534

(in millions of Korean won)

Table-5. Statistics of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2017-2022)

	2017	2018	2019	2020 ^e	2021 ^e	2022 ^e
Amount spent (tr.)	185,614.8	206.8	235.9	279.3	-	-
% of GDP (%)	10.1	10.9	12.3	14.4	14.9	

※ Source: OECD Statistics (Oct. 2023)

※ Note: 2017 to 2019: Finalized values; 2020 to 2022: Estimated values; -: No figure

Table-6. Sanctions status for reported violation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public institutions (28 Sep. 2016-31 Dec. 2022)

(unit: persons)

	Improper solicitation	Receiving and giving money, etc.	Outside lectures, etc.	Total
Sanctions (Criminal penalty, fine, disciplinary surcharge)	101	1,767	11	1,879

Investigation, trials, etc. underway	339	1,234	9	1,582
Total	440	3,001	20	3,461

Table-7. Current state of corruption reports received and processed

(unit: case, %)

		Total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YoY change (%)		
									2020	2021	2022
Received		43,922	4,066	7,328	9,435	6,103	9,690	7,300	△3,332 (△35.3)	3,587 (58.8)	△2,390 (△24.7)
Hand ling	Total	43,928	3,966	7,224	8,718	6,355	10,176	7,489	△2,363 (△27.1)	3,821 (60.1)	△2,687 (△26.4)
	Referral (sued)	1,557	221	306	415	446	128	41	31 (7.5)	△318 (△71.3)	△87 (△68.0)
	Notified the violation of codes of conduct¹	955	48	78	190	252	361	26	62 (35.3)	109 (43.3)	△335 (△92.8)
	Forwarded to the institution	4,964	127	377	369	846	2,152	1,093	477 (129.3)	1,306 (154.4)	△1,059 (△49.2)
	Finalized	36,452	3,570	6,463	7,744	4,811	7,535	6,329	△2,933 (△37.9)	2,724 (56.6)	△1,206 (△16.0)

Table-8. Current state of employees dismissed due to irregularities for each type of corruption

(unit: persons)

	Total	2017	2018	2020	2021	2021	2022 (H1)
Total	1,438	308	291	310	216	214	99
Giving and receiving money and entertainment	678	191	159	129	91	72	36
Embezzlement and misappropriation of public funds	286	51	45	65	49	53	23

¹ Includes 21 cases of Code of Conduct violations that were referred to investigators due to identified suspicions of corruption.

Abuse of authority and dereliction of duty	82	15	15	15	12	20	5
Falsification of documents	49	3	12	11	9	10	4
Others	343	48	60	90	55	59	31

Table-9. Performance of labor supervision for non-regular workers for each year

(1) Statistics on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the scale of employment of non-regular workers and informal employment, proportions per employment type, wage gap with regular workers and social insurance subscription rate for each year of the reporting period

(unit: 1,000 persons,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Scale of non-regular worker employment ¹⁾		6,578 (32.9)	6,614 (33.0)	7,481 (36.4)	7,426 (36.3)	8,066 (38.4)	8,156 (37.5)
	Temporary	3,725 (18.6)	3,823 (19.1)	4,785 (23.3)	4,608 (22.5)	5,171 (24.6)	5,348 (24.6)
	Part-time	2,663 (13.3)	2,709 (13.5)	3,156 (15.3)	3,252 (15.9)	3,512 (16.7)	3,687 (17.0)
	Informal	2,112 (10.6)	2,071 (10.3)	2,045 (9.9)	2,073 (10.1)	2,278 (10.8)	2,131 (9.8)
Social insurance subscription rate ²⁾	Employment	44.1	43.6	44.9	46.1	52.6	54.0
	Health	45.3	45.9	48.0	49.0	50.3	51.7
	Pension	36.6	36.6	37.9	37.8	38.4	38.3
Ratio of voluntary selection ³⁾		50.0	53.0	55.2	56.6	59.9	62.8
Wage gap per hour with regular workers (Regular =100) ⁴⁾		69.3	68.3	69.7	72.4	72.9	70.6

※ Source: 1) to 3) Statistics Korea, Economic Activity Census supplementary Survey by Work Type; 4)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urvey of Work Status by Employment Type

– Numbers in () represents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among wage workers

– The size of non-regular workers by work type (temporary, part-time and informal) does not add up to the total because it includes overlaps between types

▲Temporary worker: Workers with a fixed term of employment or without a fixed term but can continue to work through repeated contract renewals, and workers unable to continue working due to involuntary reasons

▲Part-time worker: Workers whose scheduled work hours are shorter than the workers doing the same type of work at the same workplace by at least one hour, typically scheduled to work less than 36 hours per week

▲Informal worker: Non-regular workers classified by the method of labor provision → Dispatch workers, service workers, special type workers, domestic workers, daily workers

– In the case of social insurance subscription rates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the

rates are lower than the actual subscription rates against those who are eligible for subscription, because the survey covers all wage earners in the household, regardless of eligibility for subscription.

(2) Number of designated supervisors responsible for discrimination in local government offices

(unit: persons)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Number of Supervisors	-	47	48	48	48	48

※ Supervisors responsible for each local office have been designated since 2018; the count of supervisors increased with the local office newly opened in 2019

(3) Status of workplace supervision on non-regular workers

(unit: number of business sites)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Dispatched, subcontracted	1,349	1,609	1,626	636	534	489
Discrimination	-	34	64	29	42	705

※ Consulting provided to address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through “Supporters for Workplace without Discrimination”

Table-10. Minimum Wage

(1) Minimum wage per year

(unit: KRW)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inimum wage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Increase	440	1,060	820	240	130	440	460
% of Increase	7.3%	16.4%	10.9%	2.87%	1.5%	5.05%	5.0%

※ The minimum wage is decided by the minimum wage committee, taking into account the economic, employment conditions, etc.

(2) Minimum wage non-compliance rate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Non-compliance rate (%)	6.1	5.1	4.8	4.4	4.4	3.4
Target (1,000 persons)	974	817	788	720	743	560

※ Labor survey related to employment status by employment type in Jun. 2022 (Statistics for 2023 will be compiled in Jun. 2024.)

Table -11. Gender wage gap in the Republic of Korea

2017	2018	2019	2020	2021	
34.6	34.1	32.5	31.5	31.1	(3.5%p decrease from 2017)

※ Source: OECD Statistics

Table-12. Statistics on gender pay gap in public institutions and listed corporations

(unit: number of institutions/corporations, KRW million %)

	Public institutions				Listed corporations			
	Institution	Men (KRW million)	Women (KRW million)	Gap (%)	Corporations	Men (KRW million)	Women (KRW million)	Gap (%)
2020	369	77.6	56.1	27.8	2,149	79.8	51.1	35.9
2021	370	78.1	57.6	26.3	2,364	94.1	58.3	38.1
2022	361	78.9	59.0	25.2	2,614	86.8	60.2	30.7

1) Avg. wage per person and gender wage gap

Table-13.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non-regular employment ratio by gender and scale of women with career interruption

(unit: %, 1,000 persons)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 (aged 15-64)		69.2	69.3	69.5	68.6	69.0	70.5
	Men	79.3	79.1	78.8	77.9	78.0	79.0
	Women	59.0	59.4	60.0	59.1	59.9	61.8
Non-regular worker % among wage workers		32.9	33.0	36.4	36.3	38.4	37.5
	Men	26.3	26.3	29.4	29.4	31.0	30.6
	Women	41.2	41.5	45.0	45.0	47.4	46.0
Women with career interruption (1,000 persons)		1,831	1,847	1,699	1,506	1,448	1,397

※ Source: Statistics Korea, Economic activity survey, employment survey for each region
(scale of women with career interruption)

Table-14. Job seeking and employment cases at the Saeil Center

(unit: case)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Hiring	488,757	511,953	509,326	576,043	557,488	547,082
Job seeking	469,891	483,802	540,396	552,198	572,560	553,590
Employment/Startup	171,125	173,064	177,592	176,866	180,610	161,772

Table -15. Performance of female interns at the Saeil Center

(unit: person)

	Affiliated Persons	Employment status after the completion of internship			
		Completed	Employed	Unemployed	Employment rate
2017	7,201	5,959	5,785	174	97.1%
2018	7,410	5,859	5,618	241	95.9%
2019	7,351	6,063	5,853	210	96.5%
2020	6,945	5,812	5,658	154	97.4%
2021	11,761*	9,611	9,312	299	96.9%
2022	10,145	8,298	8,027	271	96.7%

*Including additional supplementary budget

Table-16. Career interruption prevention support result

(unit: center count, case, company)

Year	Centers	Total cases	Performance	
			Employed	Company
2017	15	13,239	12,793	446
2018	15	16,442	15,897	545
2019	35	41,174	40,168	1,006
2020	60	49,688	47,887	1,801
2021	75	70,272	67,897	2,375
2022	75	76,848	73,491	3,357

Table-17. Vocational training result

(unit: count, person)

Year	Courses	Trainee	Trainees Completed	Completion rate (%)	Employed	Employment rate (%)
2017	791	15,753	14,788	93.9	10,829	73.2
2018	754	14,796	14,060	95.0	10,258	73.0
2019	745	14,544	13,924	95.7	10,008	71.9
2020	658	11,023	10,532	95.5	7,770	73.8
2021	738	12,573	11,998	95.4	8,800	73.3
2022	718	12,586	11,919	94.7	8,892	74.6

Table-18. Number of public kindergartens and enrolled children

(unit: center count, person)

	Oct.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Facilities	3,118	3,602	4,324	4,958	5,437	5,801
Enrolled	186,178	200,783	232,123	253,251	268,967	276,670

Table-19. Percentage of women in decision-making positions in the public sector

(unit: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Senior public officials	6.5	6.7	7.9	8.5	10.0	11.2
Director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Grade 4 +)	14.8	17.5	20.8	22.8	24.4	26.4
Directors of local government agencies (Grade 5 +)	13.9	15.6	17.8	20.8	24.3	27.4
Executives in public institutions	11.8	17.9	21.1	22.1	22.5	23.6
Managers in public institutions ¹⁾	18.8	23.8	25.1	26.4	27.8	28.8
Managers in local public institutions ²⁾	4.9	6.9	9.1	10.6	11.8	12.9
Professors in national universities ³⁾	15.8	16.6	17.3	18.1	18.9	20.2
Principals and vice principals	40.6	42.7	44.1	44.5	45.8	46.4

Military officers	5.5	6.2	6.8	7.5	8.2	9.0
General police	10.9	11.7	12.6	13.4	14.2	15.1
Administrative staff	-	5.9	6.1	6.5	6.5	5.7
Coastal Police	11.3	12.0	12.7	13.2	14.5	16.6
Administrative staff	-	2.2	2.5	2.7	3.1	3.6
Government Committees ⁴⁾	40.2	41.9	43.0	43.2	42.4	41.4

1) Change from “number of women in the managerial position” to “number of women currently in the managerial position” (same as 2017)

2) (2018) 300 or more (25ea)→(2019) expanded to all (151ea)

3) Professors in the national universities provided for in the Higher Education Act

4) Legal standard for Government Committees (40%)

Table-20. Labor inspections over unfair labor practices

(1) Results of labor inspections over unfair labor practices

(unit: case count)

		Inspection target	Identified			
			Total	Corrective order	Legal proceedings	Others
2020	Regular	80	51	49	2	0
2021	Regular	102	66	66	-	0
2022	Total	236	256	253	1	2
	Regular	198	180	179	-	1
	Ad-hoc	38	76	74	1	1

(2) Major findings identified

(unit: cases)

		Total	Trade Union Act*	Employees' Participation Act**	Labor Standard Act	Others
2020	Regular	51	13	21	7	10
2021	Regular	66	12	16	12	26
2022	Regular	180	21	67	60	32
	Ad-hoc	76	20	24	31	1

*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 Act on the Promotion of Employee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Table -21. Remedies for unfair labor practices by the Labor Commission

Year	Received	Processed							Transferred (in process)
		Total	Decision				Settled	Cancelled	
			Subtotal	Recognized	Dismissed	Rejected			
2020	1,450	1,156	741	86	627	28	102	313	294
2021	1,270	1,082	716	86	572	58	80	286	188
2022	934	786	533	85	427	21	73	180	148

Table-22. Number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beneficiaries

(unit: 1,000 persons)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Beneficiaries	1,582	1,744	1,881	2,134	2,360	2,451

Table-23. Criteria for selection of beneficiaries based on median income (MI) and type of income (2023)

(unit: KRW 1,000)

	1-person	2-person	3-person	4-person	5-person	6-person	7-person
Criteria for median income	2,078	3,456	4,435	5,401	6,331	7,228	8,108
Living benefits (30% of MI)	623	1,037	1,330	1,620	1,899	2,168	2,432
Medical benefits (40% of MI)	831	1,382	1,774	2,160	2,532	2,891	3,243
Housing benefits (47% of MI)	977	1,624	2,084	2,538	2,975	3,397	3,811
Education benefits (50% of MI)	1,039	1,728	2,217	2,700	3,165	3,614	4,054

Table-24. Number of projects and institutions subject to annual social service quality evaluation

		Evaluation project	Target		
			Total	Self-evaluation	On-site evaluation
1 st term	2013	Senior care, at-home care, maternal and child health	1,850	1,850	702
	2014	Local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18 standard models)	1,634	1,634	740
	2015	Local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3 standard models, 26 non-standard models)	1,366	1,366	513

2 nd term	2016	Senior care, at-home care, maternal and child health	1,897	1,897	705
	2017	Local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10 standard models, 8 non-standard models)	2,096	2,096	734
	2018	Local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4 standard models, 7 non-standard models)	2,471	2,471	660
3 rd term	2019	Senior care, at-home care, maternal and child health	2,030	2,030	836
	2020	Local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10 standard models, 7 non-standard models)	2,734	2,734	1,089
	2021	Local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7 standard models, 4 non-standard models)	2,951	2,951	1,347
4 th term	2022	At-home care, maternal and child health	1,098	1,098	1,098
	2023	Local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planned)	4,933	4,933	2,220

※ Standard: Models provided by the MHW for reference by local governments when planning local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14 as of 2023)

※ Evaluation was conducted for three types of local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and 357 service providers in 2012

Table-25. Coverage rates by health insurance per year

	2017	2018	2019	2020	2021
Coverage (%)	62.7	63.8	64.2	65.3	64.5

Table-26. National pensioner count: 22.49 million

(unit: entity, persons)

		2019	2020	2021	2022
Total pensioner count		22,216,229	22,107,028	22,347,586	22,497,819
	Workplace	1,949,286	2,039,009	2,137,619	2,195,391
	Pensioner	14,157,574	14,320,025	14,580,825	14,785,761
Regional pensioner, etc.		8,058,655	7,787,003	7,766,761	7,712,058

※ Source: Monthly statistics, National Pension Service

Table-27. Number of national pension recipients: 6.64 million

(unit: person, KRW million)

		Dec. 2022 ¹⁾		Total ²⁾ (1988-2022)	
		Recipients	Amount	Recipients	Amount
Total		6,642,643	34,020,076	18,430,656	288,575,327
Pension	Subtotal	6,424,917	32,817,226	7,406,659	263,671,831

Lump sum	Seniors	5,396,729	29,544,090	6,123,001	228,571,991
	Disabled	76,718	391,377	195,490	6,415,221
	Bereaved	951,470	2,881,759	1,088,168	28,684,619
	Subtotal	217,726	1,202,850	11,023,997	24,903,497
	Disabled	2,722	49,853	87,902	905,343
	Returned	199,170	1,074,442	10,700,545	23,254,813
	Deceased	15,834	78,555	235,550	743,340

Note 1) The number of recipients including who were recipients (Disqualified) and the pensions amount provided as of Dec. 2022

Note 2) The number of cumulative recipients including who were recipients (Disqualified) between 1988 and 2022 and the pensions amount provided

※ Source: Monthly statistics, National Pension Service

Table-28. Elderly abuse reporting and recognized cases

(unit: case)

	2017	2018	2019	2020	2021
Reported Total	13,309	15,482	16,071	16,973	19,391
Abuse case	4,622	5,188	5,243	6,259	6,774
General case	8,687	10,294	10,828	10,714	12,617

※ General cases refer to the cases where abuse was suspected, but the results of the on-site investigation and examination failed to prove the suspicion or evidence of abuse

Table-29. Elderly abuse budget allocation

(Unit: KRW million)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Budget	7,306	7,597	8,561	9,445	10,366	11,535

Table-30. State of elder abuse prevention infrastructure

1) Local elderly protection organizations

(unit: center)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States with centers	30	32	34	34	37	37
Centers increased	+1	+2	+2	-	+3	-
Newly established centers	Southwest Gyeongbuk	Western Seoul Gyeonggi-do	Jeju (Seogwipo) Western Incheon	-	Eastern Seoul, Southern Gyeongbuk, Northwest Gyeonggi	-

2) Shelter for abused seniors

(unit: center)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States with centers	17	17	17	18	19	19
Centers increased	+1	-	-	+1	+1	-
Newly established centers	Northern Seoul	-	-	Western Jeonnam *	Northwest Gyeongbuk	-

* Including one center operated by 100% of local government budget (Western Jeonnam)

Table-31. Number of received child abuse reports made by mandate notifiers (2018-2021)

(unit: case,

Mandate notifier of child abuse	2018		2019		2020		2021	
Teacher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6,406	(70.0)	5,901	(66.8)	3,805	(34.7)	6,065	(25.9)
Healthcare workers and medical technicians	325	(3.6)	293	(3.3)	363	(3.3)	549	(2.3)
Workers for child welfare facilities	411	(4.5)	337	(3.8)	711	(6.5)	702	(3.0)
Workers for disabled welfare facilities	56	(0.6)	38	(0.4)	46	(0.4)	47	(0.2)
Daycare center staff	213	(2.3)	448	(5.1)	182	(1.7)	241	(1.0)
Kindergarten staff and instructors	115	(1.3)	140	(1.6)	140	(1.3)	216	(0.9)
Private study center workers	18	(0.2)	32	(0.4)	42	(0.4)	35	(0.1)
Firefighters and paramedics	24	(0.3)	32	(0.4)	25	(0.2)	36	(0.2)
Sex trafficking victim counselors	8	(0.1)	4	(0.0)	3	(0.0)	1	(0.0)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y workers	14	(0.2)	16	(0.2)	30	(0.3)	26	(0.1)
Workers at domestic violence shelters and counseling centers	283	(3.1)	125	(1.4)	210	(1.9)	79	(0.3)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211	(2.3)	266	(3.0)	347	(3.2)	230	(1.0)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Workers at at-home foster support centers	25	(0.3)	26	(0.3)	51	(0.5)	45	(0.2)
Social welfare officials	-	-	-	-	632	(5.8)	7,493	(32.1)
Dedicated child welfare officials	72	(0.8)	200	(2.3)	984	(9.0)	1,097	(4.7)
Head and workers of children protection centers	-	-	-	-	2,394	(21.8)	5,785	(24.8)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workers	31	(0.3)	67	(0.8)	91	(0.8)	54	(0.2)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orkers	52	(0.6)	82	(0.9)	61	(0.6)	53	(0.2)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workers	48	(0.5)	63	(0.7)	65	(0.6)	59	(0.3)
Workers of shelters for sexual violence victim protection facilities and integrated support centers for sexual violence victims	168	(1.8)	128	(1.4)	83	(0.8)	46	(0.2)
Paramedics	0	(0.0)	1	(0.0)	1	(0.0)	3	(0.0)
Workers of youth facilities and groups	276	(3.0)	286	(3.2)	280	(2.6)	212	(0.9)
Workers of youth protection centers and youth rehabilitation centers	121	(1.3)	105	(1.2)	87	(0.8)	117	(0.5)
Babysitters	11	(0.1)	11	(0.1)	21	(0.2)	26	(0.1)
Support personnel for integrated services for vulnerable children	255	(2.8)	225	(2.5)	308	(2.8)	139	(0.6)
Workers for child care centers	4	(0.0)	9	(0.1)	10	(0.1)	10	(0.0)
Workers for adoption agencies	4	(0.0)	1	(0.0)	1	(0.0)	6	(0.0)
Total	9,151	(100)	8,836	(100)	10,973	(100)	23,372	(100)

※ Sou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ajor Statistics of Child Abuse」

Table-32. Measure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Urgent measures	Urgent ad hoc measures	Ad hoc measures	Protective measures	Orders to protect abused child
T y p e o f m e a s u r e s	1. Halting the criminal actions of child abuse 2. Separation of the abuser from the child or children who have been victimized 3. Placing victimized children in shelters related	1. Isolation of the victimized child or household member by means such as eviction 2. Banning access to the child or household members within 100 meters of the child's residence, school or shelter 3. Prohibition of access to the affected child or	1. Isolation of the victimized child or household member by means such as eviction 2. Banning access to the child or household members within 100 meters of the child's residence, school or shelter 3. Prohibition of access to the affected child or	1. Restriction of access of child abuser(s) to the abused child or his/her family members 2. Restriction of access of child abuser(s) to the abused child or his/her family members through telecommunications as outlined in Article	1. Isolation including eviction of the child abuser from the child's residence or room occupied by the child 2. Restriction of access of child abuser(s) to the abused child or his/her family members 3. Restriction of access of child

to child abuse 4. Transportation of a child in urgent need of medical care to a medical facility.	household members through telecommunications, as outlined in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etc.	household members through telecommunications, as outlined in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etc. 4. Restriction or suspension of the exercise of parental or guardianship authority 5. Entrustment of counseling and education to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organizations, etc. 6. Referral to a medical institution or other nursing facility 7. Detention in a police station or detention center (May be combined)	2, sub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etc. 3. Restriction or suspension of the exercise of parental or guardianship authority against the abused child 4. Ordering community service or training under the Probation Act 5. Probation under the Probation Act 6. Entrustment to a detention center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Justice or a protective facility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7. Entrustment of medical treatment to a medical institution 8. Entrustment of counseling to child protection organizations, counseling centers, etc.	abuser(s) to the abused child or his/her family members through telecommunications as outlined in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etc. 4. Entrustment of the abused child to a child welfare facility or a welfare facility for the disabled 5. Entrustment of the abused child to a medical institution for medical treatment 5-2. Entrustment of counseling and medical treatment to a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organization, counseling center, etc. 6. Entrustment of the abused child to a relative, etc. 7. Restriction or suspension of the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against the abused child 8. Restriction or suspension of the exercise of guardianship authority against the abused child 9. Decisions deemed the intention of the parent or guardian
--	---	--	---	---

Table-33. Number of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child abuse

Year	2018	2019	2020	2021	2022. 12.
People	-	-	292	747	852

Table-34. Number of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centers

Year	2018	2019	2020	2021	2022
Centers	62	67	69	77	85

Table-35. Number of centers for abused children

Year	2018	2019	2020	2021	2022
Centers	65	73	74	98	125

Table -36. Major PR performance of foster households

2021	Media PR	Press release (Mar. 2021), SBS TV public service announcement (Mar. to Apr. 2021), CBS Radio Campaign (Mar. to Apr. 2021; Nov. 2021), utilization of local government billboards (Mar. 2021), etc.
	Online portal PR	Posting PR videos and leaflets, etc. on the websites of MOHW and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Mar. 2021), online portal ads (Mar. to Apr. 2021), YouTube CJ ENM Channel ads (Jul. to Aug. 2021), etc.
2022	Media PR	Press release (May 2022), SBS TV public service announcement (May to Jun. 2022), transmission to YouTube channels (May 2022), CBS Radio Campaign (Dec. 2022)
	Online P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web posters about the application for specialized foster child care (Jul. 2022), posting public service announcement videos on the POS machines in CU convenience stores (Oct. 2022 to Jan. 2023)
	Others	Promo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websites and social media PR (3 items), publication of business materials in the guides for related organizations (Sep. 2022; 2 items), distribution of leaflets, etc.

Table-37. Water-related complaint count (water quality, outages and leaks)

(unit: case))

	Total	2017	2018	2019	2020	2021
Complaints (water quality)	126,909	21,223	23,352	30,994	24,767	26,573
Complaints (water outages)	96,960	16,028	28,829	16,214	16,330	19,559

Complaints (water leaks)	556,560	102,150	117,486	104,219	105,082	127,623
---------------------------------	---------	---------	---------	---------	---------	---------

Table -38. Cumulative maintenance volume of old pipeline maintenance projects

(unit: km)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umulative maintenance volume	-	99	397	699	1,340	1,809

Table-39. Customized technical support for purification plants

(unit: case)

	Total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echnical support	581	56	40	42	124	152	167

Table-40. Water quality test results in areas with contamination concerns

(unit: plant, %)

	Total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Water quality test results (pipe)	12,528	2,061	2,142	2,019	2,104	2,100	2,102
Exceeded well	7,008	1,345	1,377	920	1,125	998	1,243
Exceedance rate (%)	56.0	65.3	64.3	45.6	53.5	47.5	59.1

※ Exceeded well: Exceeded the water quality standards for fresh water

Table-41. Efficiency of water supply refurbishment in vulnerable areas

(As of Jul. 2023; unit: plant)

Environment improvement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Disinfected and Cleaned Facilities		-	1,503	2,048	2,010	2,005	2,297
Refurbished Facilities		100	102	103	113	160	151
Water quality exceedance rate (%)	Before Refurbishment	-	49.2	36.9	19.6	18.6	58.8
	After Refurbishment	-	11.7	5.9	3.8	1.8	6.6
Total efficiency (%)		-	76.2	84.0	80.6	90.3	88.8

※ Calculation of total efficiency compared to pre- and post-refurbishment water quality results (total coliforms), excluding preventive purposes

Table-42. Rental housing status by year

(unit: 10K houses)

Year	Total rental	Public landlords			Private landlords								
		Subtotal	Central (LH)	Local	Private public construction rental housing			Private rental housing					
					Total	5 yrs	10 yrs	Subtotal	Short-term	Quasi-public	Company	Long-term general	Publicly supported
2017	244.5	128.2	101.7	26.5	16.0	8.7	7.3	100.3	86.8	5.7	7.8	-	-
2018	298.5	138.8	111.8	27.0	18.2	8.2	10	141.5	102.3	14.8	9.8	13.3	1.3
2019	304.4	148.9	120.2	28.7	17.1	7.1	10	138.4	94.5	11.6	9	21.8	1.5
2020	327.0	159.4	128.1	31.3	14.3	4.5	9.8	153.3	53.0	-	-	94.7	5.6
2021	329.0	166.8	133.3	33.5	11.2	2.8	7.4	151.5	43.4	-	-	100.6	7.4

※ Sour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Table-43. Number of support cases of psychological counseling at the Health Center for Workers

(unit: case)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Worker Health Center	47,128	49,123	36,839	21,946	26,642	27,143
Trauma Center	-	419	911	1,932	4,218	4,320

Table-44. EAP service support results

(unit: case)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Individual	10,209	8,427	11,415	10,991	11,057	12,207
Corporations/Groups	1,864	2,633	2,561	270	325	432

Table-45. Psychological wellness programs for unemployed and job seekers support results

(unit: case)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Psychological support	46,423	49,574	56,943	46,323	62,938	64,397

Table-46. Support for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by year

(unit: case)

	2018	2019	2020	2021	2022	Mar. 2023
Pregnancy maintenance and termination counseling	-	-	-	1,874 (Enforced in Jul. 2021)	3,830	924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12,330	13,821	13,576	13,459	14,853	3,583
Medication counseling for pregnant women	13,722	15,729	15,011	18,833	24,758	5,676

Table-47. Students eligible for free education

(unit: persons)

Year	2019	2020	2021	2022	2023
Eligible students	487,496	877,512	1,240,938	1,203,386	1,197,019

※ In 2019, the cost of free education was funded by the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 budget

Table-48. Students subject to special education

(unit: persons)

	2019	2020	2021	2022	2023
students	92,958	95,420	98,154	103,695	109,703

Table-49. Number of special schools and classes

(unit: school/class)

	2019	2020	2021	2022	2023
Special schools	177	182	187	192	194
Special classes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Table-50. Major projects in the cultural diversity protection and promotion policy

Project	Details
Conduct life-cycle education to spread cultural diversity val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kindergartens and elementary schools focusing on research on cultural diversity (2016-2021, 4 schools per year) - Developed and operated a job training program to cultivate cultural diversity competencies of teachers (from 2016) - Developed and operated educational contents to raise job-related cultural diversity awareness for professionals such as cultural institution employees and cultural content producers (from 2015) - Operated a course on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in conjunction with the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K-MOOC) for the general public (from 2022)
Promote public awareness campaigns on the occasion of Cultural Diversity Week	- Designated Cultural Diversity Week (21 to 27 May, Article 11 of the Cultural Diversity Act) to commemorate the UN-designated World Cultural Diversity Day (21 May), and promoted publicity and campaign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from 15)
Support for activating communication and exchange between various cultural entities in the comm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ort for local cultural institutions to operate cultural programs to activate mutu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local residents with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in line with nationality, region and generation (from 2012; 20 regions nationwide) - Support for the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MAMF), a cultural diversity festival organized and promoted by migrants themselves (with the participation of diaspora associations from 14 countries), to ensure the cultural rights of migrants and promote domestic and foreign exchanges (from 2005)

Table-51. Cultural diversity awareness of participants in cultural diversity projects (2019–2022)

	Satisfaction (%)	Pre-recognition (Point / out of 100)	Post-recognition (Point / out of 100)	Pre-post recognition change (%)
2019	85.9	69.6	76.6	10.1
2020	82.4	67.4	76.2	13.1
2021	85.0	71	83.8	18.0
2022	86.7	73.2	84.3	15.2
Average		70.3	80.2	14.1

Table-52. Complaints received about discrimination for the last five years

(unit: case)

Year	Total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Subtotal	Recruitment	Hiring	Training	Assignment	Promotion	Wage payment	Money other than wages	Financing	Retirement age	Retirement	Dismissal	Others
Cum.	38,544	11,052	1,583	2,150	191	843	450	1,903	415	8	278	279	885	2,067
2022	2,036	726	37	95	7	193	21	223	24	-	11	3	23	89
2021	2,564	597	56	98	6	60	42	137	18	1	9	11	38	121
2020	2,426	704	60	109	9	50	36	191	22	-	3	1	25	198
2019	2,730	852	60	110	22	66	34	223	31	1	11	27	31	236
2018	2,208	573	75	112	23	47	31	89	24	-	6	10	45	111

Year	Discrimination in supplying or using goods or services							Discrimination in using a vocational facility, etc.			Sexual harassment				Others
	Subtotal	Service	Goods	Transportation	Commercial facilities	Lands	Residential facilities	Subtotal	Educational facilities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Subtotal	Employment relations	Work relations	Other relations	
Cum.	15,653	6,091	6,117	1,537	1,345	41	522	2,039	1,901	138	2,501	1,750	70	681	7,299
2022	882	273	306	79	191	3	30	91	80	11	171	126	2	43	166
2021	1,240	623	278	62	125	3	149	75	68	7	210	142	12	56	442
2020	1,192	404	399	286	73	2	28	90	79	11	217	153	10	54	223
2019	976	403	369	53	121	-	30	107	94	13	309	208	16	85	486
2018	1,054	521	365	70	83	1	14	92	82	10	255	189	9	57	234

※ The cumulative number is from the date of the committee's inception (Nov. 25, 2001) to 31 December 2022.

Table-53. Percentage of gender markers applied (by approval amount)

(unit: USD million,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Amount Approved	165	343	490	235	571	935
Portion (%)	11.4	19.4	22.0	31.7	25.0	35.7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법무부 인권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홈페이지 : www.moj.go.kr

편집·인쇄 : 동광문화사 02-503-5165